
2014년 업무 추진계획

- 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

2014. 2. 19.





목 차



I . 기관 현황	1
II . 2013년 추진실적 및 평가	5
III . 2014년 정책여건	10
IV . 2014년 주요 업무계획 “국민 행복을 위한 7가지 약속”	12
1. 일자리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일하겠습니다.	15
2. 해양수산업을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바꾸겠습니다.	19
3.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를 개척 하겠습니다.	30
4. 바다와 연안, 도서를 국민의 행복한 삶터로 만들겠습니다.	37
5.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로 가꾸겠습니다.	45
6. 해양관광과 문화가 융성한 국가로 키우겠습니다.	54
7. 일 잘하고 신뢰받는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	61
V . 기대효과	68
VI . 분기별 추진계획	71

I. 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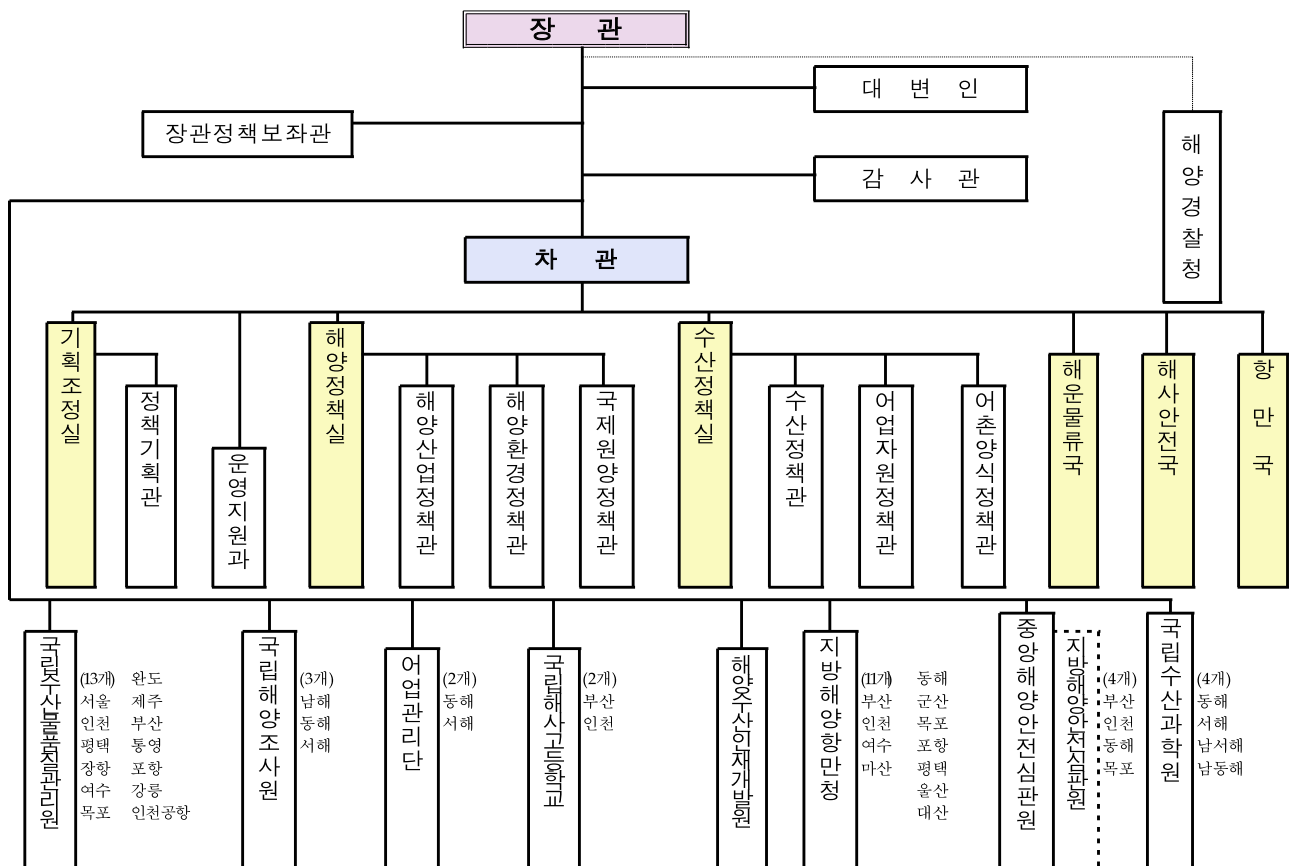
1 주요 소관업무

- ① 해양 영토·공간 관리,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과학기술 개발
- ② 안정적인 수산식품 공급, 수산자원 관리 및 어촌 복지·개발
- ③ 해운·물류산업 육성, 항만 건설·운영 및 국제물류 촉진
- ④ 해양안전 총괄, 재해 예방 및 해양 관광·레저 육성

2 조 직

◆ 본부 : 1차관 3실 3국 9관(41과)

◆ 소속기관 : 74개(1차 20개, 2차 43개, 3차 11개) * 책임운영기관 : 3개



□ 해수부 출범 이후 총 41건의 법률을 제·개정(단독 28건, 공동 13건)

* 제정(2)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3.6) 등

개정(39)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선박안전법 등

소관	주요 법률
해양 및 해양환경(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업발전기본법, 해양환경관리법, 연안관리법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수산(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 내수면어업법, 어촌·어항법,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시에 관한 법률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낚시관리 및 육성법 · 소금산업진흥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
해운·물류 · 항만(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법, 물류정책기본법 · 도선법, 항만운송사업법, 개항질서법 · 선원법, 선박직원법 · 국제선박등록법, 선박투자회사법,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항만법, 항만공사법, 신항만건설촉진법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해사안전(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법, 선박등기법,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항로표지법, · 선박평형수 관리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
해양경찰(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난구조법, 수상레저안전법, 밀항단속법, 해양경비법 등

□ '14년도 세출예산과 기금의 총 규모는 4조 3,796억원

○ '13년(4조 2,660억원) 대비 2.7%인 1,136억원 증가

* 융자 사업 일부가 이차보전(677억원)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할 경우 '13년보다 4.3%가 증액된 1,826억원의 규모

○ '14년에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 R&D,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컨테이너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만 정비 분야에서 증액

○ 경기 회복세 유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상반기까지 기본경비·인건비 등을 제외한 예산의 57.5%인 23,363억원 집행 예정

(단위 : 억원)

구 분	'13년 (A)	'14년 (B)	증감 (B-A)	
			(B-A)	%
□ 총지출(A+B)	42,660	43,796	1,136	2.7
□ 세출예산 계(A)	36,613	38,051	1,438	3.9
○ 해운·항만	15,091	15,052	△39	△0.3
○ 해양, 물류 등 기타	5,622	6,346	724	12.9
○ 수산·어촌	12,473	13,371	898	7.2
○ 해양환경	1,874	1,728	△146	△7.8
○ 과학기술연구지원	1,553	1,554	1	0.1
□ 수산발전기금(B)	6,047	5,745	△302	△5.0

- (현황) 해양수산 공공기관은 총 14개로서 ①공기업 5개(시장형 2, 준시장형 3), ②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개, ③기타 공공기관 6개

* 전체 304개 대비 4.61%(공기업 16.7, 준정부기관 3.5, 기타 공공기관 3.2)

- (부채) '12년말 기준 3조 1,43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493.4조원의 0.64%* 수준

* ('08) 부채 0.76조원, 비중 0.26% → ('09) 1.57, 0.47 → ('10) 1.87, 0.47 → ('11) 3.08, 0.67 → ('12) 3.14, 0.64 ⇨ '11년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설립으로 규모 증가

기관 구분	기능 및 역할
■ 시장형 공기업(2개)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의 개발과 관리·운영
인천항만공사	· 인천항의 개발과 관리·운영
■ 준시장형 공기업(3개)	
여수광양항만공사	· 여수·광양항의 개발과 관리·운영
울산항만공사	· 울산항의 개발과 관리·운영
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양환경 개선사업 및 해양오염 방지활동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개)	
선박안전기술공단	· 선박검사업무와 관련기술 연구·개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해양인력의 교육·훈련 및 해기사 시험관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조성, 종묘방류 등
■ 기타 공공기관(6개)	
(주)부산항보안공사	· 부산 북항 경비·보안 업무
(주)인천항보안공사	· 인천항 경비·보안 업무
항로표지기술협회	· 항로표지 제작과 관련 기술 연구·개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해양과학기술정책 지원 및 R&D 기획·관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해양과학기술개발 및 연구 등
한국어촌어항협회	· 어촌어항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조사·연구

Ⅱ. 2013년 추진 실적 및 평가

1

주요 추진실적

□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행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

- 「고용률 70% 로드맵」 관련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창출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2,200개의 신규 일자리* 마련('13년 목표 1,844개 초과 달성)

* 마리나 : 456개, 양식단지·유통구조 개선 등 : 153개, 신규 부두 개장·항만 배후단지 기업유치 : 765개, 선박평형수 : 636개, 선박관리산업 190개 등

□ 해양수산 경제활성화를 위한 성장 모멘텀 강화

- '17년까지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10대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40조원대 시장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新산업 육성대책 마련('14.2)

* 예산 : ('11) 4,025억원 → ('12) 4,452 → ('13) 5,184 → ('14) 5,526

- 해운산업 불황 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 및 항만 인프라의 적기 확충**을 통해 '컨' 물동량 처리 세계 5위(2,344만 TEU)의 위상 유지

* 차환(1개, 2,240억원), P-CBO 발행 지원(7개, 611억원) / ** 10선석, 배후단지 812천㎡ 공급

-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수립('13.7)

* 도매시장 현대화, 직거래 확대, 위생·물류 환경 개선, 수급관리·관측 강화 등

□ 해양수산 부문의 창조경제 실현 기반 구축

- 물류·금융의 융합을 통한 에너지 분야 창조경제 구현 및 세계 4대 액체화물 항만 도약을 위한 동북아 오일허브항 착공('13.11, 울산)

- 선박평형수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지원하여 강소형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연계되는 성장모델 제시(국내기업 세계시장 57% 점유)

- 심해광물 로봇의 해저 주행시험 성공('13.7), 해조류 신품종 개발(2건) 및 한국형 e-Navigation 추진방안 수립('13.11) 등 신시장 개척

- 해양수산업의 외연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 제시
 - 북극 종합정책 수립('13.7)에 이은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공('13.10) 및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2단계 착공('13.10) 등 극지 경제영토 개척
 - 크루즈 종합대책('13.7), 거점형 마리나 설계 착수('13.8), 선박관리 산업 활성화대책('13.12) 등 일자리 효과가 큰 산업의 육성 기반 마련
- 바다와 연안을 복지와 안전, 쉼이 있는 국민 행복공간으로 정비
 - 적조 피해 신속 지원('13.9), 양식재해보험 가입률 제고(12→23%) 등 어가 경영 안정 및 여객운임 지원·접안시설 정비 등 도서민 교통복지 개선
 - 해양사고 30% 감소* 대책('13.4), 연안침식관리구역제 도입('13.8) 등 안전관리체제 구축 및 기후변화 대비 CO₂ 해양저장후보지 결정('13.12)
 - * 전년 대비 해양사고 △12.1%(726건 → 639), 사망·실종 △14.9%(114명 → 97)
 - 해양관광·어촌 관련 법·제도 정비, 해수욕장·연안 휴양공간(7개소) 정비 및 해양스포츠 체험(72만명) 등 해양레저 저변 확대
-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사회 리더쉽 제고
 - 해외항만 협력사업을 통한 국내 기업의 항만공사 수주* 지원 및 원양 어업기지를 물류거점으로 확대 정비(한-스페인 해양수산협력센터, '13.10)
 - * (알제리) 1.5억불 공사 수주, (투르크메니스탄) 수리조선단지 등 1.3억불 수주
 -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국 7연임 및 OECD, FAO, IOPC 등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 협업 행정문화의 확산을 통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 도출
 - 중국 어선 공동 감시·단속 합의('13.10) 등 中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13.6) 성과를 공고화
 - 60여년 만에 전국 40여 업종에 대한 대규모 조업구역 조정('13.12)을 통해 업종 간 상생과 영세 어업인 및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

2 평 가

□ 국정비전·철학을 해양수산 전 분야에 뿌리내리기에는 한계

-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발굴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3.0 확산, 비정상의 정상화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 유도는 여전히 미흡

□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충족시키고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

- 해양관할권 강화에도 주변국의 관할권 훼손 시도*는 여전히 하며, 개별·산발적인 해양조사로 인해 자료의 전략적 활용 곤란

* 교과서·영상 등을 통한 독도영유권 주장(日), 이어도 해역 항공기 출현 증대(中) 등

- 바다, 연안, 도서, 항만, 어촌·어항 등 해양 공간의 유기적 연계 및 통합적 관리방안 등에 대한 비전 제시 미흡

- 9.6 임시특별조치를 통한 日産 수산물 금수, 방사능 검사 강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불신 해소에는 한계

* 소비 감소 : 대형마트 약 △10%, 전통시장 △30%, 횃집 △16%, 도매시장 △8%

- 계속된 원양 불법어업으로 국가 이미지 훼손 및 신뢰도 저하

□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개별 경제주체 입장에서는 역부족

-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인식과 이해 부족 등으로 해운불황 극복을 위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한계

- 해운경기 침체 및 리스크 관리 어려움으로 민자항만 경영 악화

* MRG 지급 규모 : ('11) 209억원 → ('12) 368 → ('13) 409

□ 산하 공공기관(14개)의 부당 전매, 인사 비리 등 비정상적 관행 상존

* 단, '12년말 기준 14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39.9%로 양호한 수준(전체 208%)

< 국정과제 실적 평가 >

- ◆ (추진실적) 해수부 소관 모든 국정과제(주관 2개, 협업 13개)를 차질 없이 정상추진중이며, 특히 주관과제인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 해양환경 보전 등에 있어 주요성과 창출

□ 수산종자사업 육성 등 수산자원 확보 기반 구축

- Golden Seed 프로젝트 본격 착수, 해조류 신품종 개발*, 킹넙치 개발**, 넙치종자보급센터 건립, 바다식목일(5.10) 제정 등

* 로열티 절감액(김, 미역) : '13년 25억원(추정)

** 성장이 30% 이상 빠른 신품종을 개발하여 미국 등 10건의 상표 등록

□ 한·중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어업주권 확보

- 「한·중 정상회담」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한·중 협력기반 구축('13.6)
 -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등 한·중 어업공동위 합의('13.10) 및 중국어선 서해 조업현장 공동시찰('13.11.12)

□ 해양경제영토 확장·개척을 위한 대·내외 기반 강화

- 북극이사회 옵서버 진출('13.5) 및 북극항로 시범 운항('13.9)
-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극정책 기본계획*('13~'17)」 수립('13.12)
 - * 국제협력, 과학조사 및 연구, 북극 비즈니스 발굴·추진 등 31개 정책

□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및 마리나산업 육성 기반 마련

- 거점형 마리나항만(6개소) 조성 추진('13.8~'14.8, 기본조사설계 중), 「마리나항만법*」 개정안 국회 발의('13.10.31) 및 무료체험교실(50개소) 운영
 - *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등록, 선박·시설 회원모집 근거 등

< 국정과제 실적 평가 >

□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화호('13.7)로 확대 시행

* 해당 해역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07년 마산만에 최초 시행

- NGO, 시행청*, 수자원공사 등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목표수질** 합의, 지역개발과 해양환경보호 간의 조화 도모

* 군포 · 시흥 · 안산 · 화성시, 경기도

** 시화호 목표수질 설정(COD기준) : 3.95ppm('04~'12) → 3.3ppm('13~'17)

□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12년 18개소→'13년 21개소)

-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결의한 아이치타겟* 목표달성으로 해양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노력에 있어 국가 위상 제고

* 해양면적의 1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 우리나라는 '13년 현재 약 20% 지정

□ 연안침식관리구역제 도입(연안관리법 '14.8 시행)

-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임의적 개발 제한

□ '폐수 및 폐수오니 한시적 해양배출 인정기준' 마련('13.9)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환경단체와 산업계의 상반된 요구*를 조정하여 배출 인정기준 마련 · 시행

* (환경단체) '14년 해양배출 전면금지 요구, (산업계) '15년까지 전면유예 요구

◆ (개선 · 보완방향) 해양수산업 미래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육상오염원 관리에 대한 정책 기본방향 정립 등이 필요

Ⅲ. 2014년 정책 여건

① 과거 높은 성장률을 시현한 해양수산업의 성장세* 둔화 경향

* '90~'08년 연평균 생산증가율 12.2%(산업 평균 10.8%), '00년 이후 GDP 기여도 6%대 정체

○ 세계는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해양수산업을 전략 육성

* (中) '11년 「제12차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해양산업 발전 촉진을 최초로 명문화, '15년까지 해양부문 GDP 점유율 15% 달성 목표를 제시

** (OECD) 글로벌 미래산업으로 해양을 주목, 「해양경제의 미래」 연구 착수('14~)

○ 특히, 해양 에너지·바이오·플랜트, 수산양식, 선박평형수 처리 등 신산업*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群으로 부상

* '10~'20년간 연평균 증가율(매출) : 20.5% vs. 전통산업(해운, 항만, 수산 등) 4.5%

☞ 과학기술과 아이디어, 타 산업과의 융합 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산업구조 혁신 및 성장 잠재력 확충 필요

② 태평양, 특히 동북아 해역은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각축장으로 급부상

○ 中의 이어도 해역의 방공식별구역 편입 과정에서 잠재된 해양 영토·자원 갈등이 표면화

○ 또한, 태평양 국가 간의 양·다자간 FTA, 美 주도의 TPP, 中·ASEAN이 참여하는 RCEP 등 메가 경제블럭 형성 가속화

○ 특히, 인구 5억·GDP 6조 달러의 동북아 권역은 태평양과 북극 항로 및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물류 요충지로 부상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국내 항만물류 인프라를 레버리지로 해상운송 중심의 동북아 물류 체계 재편 주도 시급

③ 해양공간에 대한 개발 압력, 레저 수요 및 보존 필요성 동시 증대

-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했던 臨海 지역의 성장 정체로 인해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
- 침식·침수 등 재해피해, 항만 등 시설 노후화, 어촌 고령화 등에도 불구하고, 그간 연안과 도서는 국토관리와 안전 정책의 사각지대
-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크루즈, 마리나 등 해양관광·레저 서비스 산업은 연안과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부각

* 해양관광객 연평균 9% 증가 전망(KMI) : ('08) 139백만명 → ('14) 218

☞ 해양, 연안, 도서, 항만, 어촌·어항의 통합관리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 요구

④ 수산식품 시장이 생산자 주도에서 소비자 주도 시장으로 변화

- 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소비자의 감성, 위생·안전·품질 등을 고려한 제품 차별화 요구 증대

☞ 엄격한 위생수준과 브랜드 파워를 확보하여 소비자 안심 제고

⑤ 해양수산 부문의 개방 및 규모화 경쟁 가속화

- FTA로 인한 수산물, 선박검사·기자재 인증시장의 개방 압력 증가로 국내 기업의 외생적 위협요인 확대
- 세계 3대 해운사의 P3 얼라이언스, 18천 TEU 이상 초대형 선박 및 생산~판매를 수직계열화한 글로벌 수산기업 등장으로 무한경쟁 돌입

☞ 개방에 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시장 개방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기회로 전환

IV.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미션

“바다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바다를 국민의 행복 공간으로 만든다”

비전

“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핵심 가치

창의·도전 / 미래지향 / 소통·배려

정책 목표 (17년)

- 해양수산업 GDP 기여율 : 6.3% → 7%

- 해양수산 신규 일자리 : 34,595개

*(13) 2,200 → (14) 5,105 → (15) 11,506 → (16) 7,576 → (17) 8,208

< 국민 행복을 위한 7가지 약속 >

1. 일자리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일하겠습니다.

가. 2014년 목표

나. 시간선택제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다. 창의적 인재 양성과 고용 안정을 위한 교육 내실화

2. 해양수산업을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바꾸겠습니다.

가. 성장 장애요인 해소

나. 저성장 업종 · 신규 진입자를 위한 성장 사다리 구축

다. 기업 애로 해소 및 규제 개선

라. 해양수산 유망산업 육성

마.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

3.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를 개척하겠습니다.

가. 극지 진출 역량 강화

나. 유라시아 新물류 루트 구축

다.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라. 해양수산 글로벌 리더십 제고

4. 바다와 연안, 도서를 국민의 행복한 삶터로 만들겠습니다.

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서 관리 강화

나. 연안을 경제활성화의 전략거점으로 육성

다. 빠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 해상교통망 구축

라. 해양영토 관리기반 확대 및 조사역량 제고

5.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로 가꾸겠습니다.

가. 현장·생활 밀착형 해양안전 관리체계 구축

나. 재해·재난·식품안전 예방체계 확립

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조성

라. 불법어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6. 해양관광과 문화가 융성한 국가로 키우겠습니다.

가. 크루즈·마리나 산업에 선제적 투자 확대

나. 지역경제의 실핏줄이 되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다. 국민 참여형 해양문화·교육 기반 조성

7. 일 잘하고 신뢰받는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

가. 개방·공유의 투명한 행정 지향

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관리

다. 국민 일상생활 속의 불편함을 먼저 해소

< 정책 추진 배경 >

◆ 정책 목표

- '17년까지 좋은 일자리 34,595개(순증)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사업관리 강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 정책의 가치

-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기조 모두 일자리와 관련되며, 14개 추진 전략 중 10개가 일자리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 일자리는 삶의 기반이자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으로 일을 통해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낄 때 국민행복 실현 가능

- 창조경제, 정부 3.0,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 활성화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의 결과는 일자리 창출로 귀결

* G20 정상회의('13.9.6) : 창조경제와 원칙 선 시장경제가 일자리의 해법

◆ 장애요인 및 해소 방안

- 일선 행정 현장에서 일자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

⇒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사업을 일자리를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등 일자리 중심의 업무 문화 확산

* 일자리 정책·사업에 인력과 재정 우선 투입 및 성과관리 강화

- 현장 수요와 격리된 학교·직업 교육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발생

⇒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에 강한 인재 양성을 위한 일-학습 병행 시스템 구축

가. 2014년 일자리 창출 목표

국정과제 53.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대통령 지시사항('13.6.11.) “고용률 70%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 「고용률 70% 로드맵」 13개 과제를 포함한 36개 사업을 집중 관리하여, '14년에는 총 5,105개의 신규 일자리 마련 ('17년까지 34,595개)

< 정부 사업의 연도별 일자리 창출 규모 >

구 분	'13	'14	'15	'16	'17	계
						('13~'17)
일자리 순증	2,200	5,105	11,506	7,576	8,208	34,595

- 노후화된 항만 재개발, 크루즈·선박관리산업 전략적 육성,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및 e-Navigation 세계시장 선점 지원 등을 통해 3,009개 창출
- 해양바이오·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 기술개발, 여수박람회장 해양관광특구 조성 및 마리나산업 육성 등을 통해 1,803개 창출
- 수산식품산업 육성, 신개념 양식산업화 등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특화어항 개발 등 어촌 6차산업화 추진을 통해 293개 창출

※ '14년 산하 공공기관(11개)에서는 신규 1,063개 창출(~'17년 15,734개)

- 일자리 사업에 재정·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일자리 예측 의무화 등

* 재정사업 시행자 선정 시 일자리 목표 제출 의무화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경우 차년도 사업자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등

나. 시간선택제·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 (시간선택제) 경력 단절자·여성·청년 대학생의 취업 및 커리어 관리를 위하여 기존 일자리 사업을 시간선택제로 전환 적극 유도
- 14개 공공기관 포함 38개 직위의 일자리를 시간선택제로 전환

- (연근해 자원조사원) 유연 근무시간제 도입 등 지역 여성·대학생 채용 확대('14.3) 및 승선 조사원제 도입 검토('14.5) 등 개선방안 마련

* 규모(시간제 도입시) : ('14) 70명(시간제 0) → ('15) 120(20) → ('16) 130(30) → ('17) 140(40)

- (원양어선 읍서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93.6%에 이르는 높은 이직률 저감 방안 마련('14.4)

- (기타) 수산물 원산지 단속, 검역·검사 및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 인력 선발시 시간선택제 채용 확대

□ (사회서비스) 국민 편의와 해양수산 공공재 관리 강화 등을 위한 공공 일자리 지속 유지·확충

- (해안쓰레기 수거) 어업인, 지역 주민 등이 공공근로 방식으로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

* '17년까지 매년 320명 투입(연 60일 근무 기준)

- (항만 보안) 항만개발계획에 따른 인력을 적기 확충하고, 취약근무지를 중심으로 근무체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

다. 창의적 인재 양성과 고용 안정을 위한 교육 내실화

① 수요자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 국정과제 58-①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노력 강화

- (신규 진입자) 현장에 강한 선원, 수산 후계자 및 해양플랜트 서비스 인력의 양성 및 공급 확대

- (선원)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의 단계적 증원('14. 60명 → '17. 500) 및 해사고 졸업생 커리어 패스^{career path} 관리제도 개발·운용('14.6~)

- (어업후계자) 어업인 후계자(500명)에 대한 자금 확대 지원(지원 한도 0.5억원 → 0.7) 및 어촌 정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

- (해양플랜트) 수요가 증가하는 운송·설치·유지 보수 등 서비스 분야 직업교육의 단계별 확대* 및 해외 취업 촉진방안 마련('14.5)

* ('14) 운영 인력 기초안전 교육 실시 및 단기 양성 프로그램 개발(고용부 협업) ('13~) 기초 안전 → ('15~) 단기 실무 취업 → ('17~) 고급인력 양성

○ (경력자) 교육 강화 등 전문성 제고를 통한 (재)취업을 제고

- (해운·항만) 취업을 제고를 위한 산·학 연계사업 및 전문인력 육성 2단계 사업* 완료('14.12)에 따라, 3단계 추진방안 검토('14.5)

* 2단계 사업 추진결과 장·단기 과정을 포함한 6개 분야에 연평균 1,000여명의 인력을 양성 중이며, '13년 최초로 산·학 연계 사업으로 55명의 인턴십 추진

- (항만하역) 재해 예방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안전 교육·주기적 재교육 의무화('14.12) 및 하역 메뉴얼 확대 보급

2 일-학습 병행교육 등 교육 서비스 개선

국정과제 70-1 관련부처·지자체 및 산업체 연계 특성화고 육성

○ (해사高) 실습관, 전자해도 시뮬레이터 구축 등 교육 여건 개선

○ (오션폴리텍) 기업과 연계한 현장 실무교육 신설('14.2), 교육생 훈련 수당 지급 및 채용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현장에서는

· 정부의 해기사 교육 지원은 좋은데, 수입이 없는 교육 기간 중에는 생활고로 인해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오션폴리텍 졸업생 男, 35세)

○ (수산마이스터高) 산업 현장과 연계된 수산계 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20억원, 10개) 및 실습장비 제공·교체 지원(7억원)

< 정책 추진 배경 >

◆ 정책 목표(국정과제와의 연계성)

- 위험요인 극복(10-1, 31-4, 132), 창조경제 DNA의 확산 등을 통한 전통산업의 미래산업화(11, 7-1, 31-4 등)로 역동적 산업으로 대약진

* 해양수산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성공 스토리 발굴

◆ 정책의 가치 : 경제활성화와 국민과 종사자의 행복에 기여

- 경제 위험요인 해소 및 기술혁신 ·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산업구조 혁신

* 시정 연설 : 문화와 보건, 의료, 환경, 해양,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

- 중견 · 중소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 및 창업 활성화

* 신년 기자회견 : 중소 ·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성장단계별로 경영 애로 해소 및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나가겠음

- 한 · 중 FTA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동시에 도약의 기회로 활용

* 농축수산물인 오찬간담회('13.12.12) : FTA를 기회로 농축수산물이 안전하고... 좋은 브랜드화 되어 한류와 함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겠음

◆ 장애요인 및 해소 방안

- 글로벌 경기 · 규제 등 대외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기초체력보다 외형 확산에 보다 중점

⇒ 금융, 과학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성장판을 키우는 동시에 친환경 기술 등 신성장 업종 발굴 · 육성

- 고질적 선원 구인난, 영세 업종의 성장 정체 및 창업(수산) 곤란

⇒ 복지 확충, 업종별 맞춤형 지원(융자 등), 자본 유입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

가. 성장 장애요인 해소

기 존	· 경기 등 대외 요인에 취약한 산업 구조	⇒	개 선	· 대외 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 성장 여건 마련
--------	----------------------------	---	--------	-------------------------------

☞ 당면 위기 극복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초체력 강화

① 해운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불황 극복 및 성장기반 조성

국정과제 10[2] 해운·물류산업 활성화
대통령 지시사항('13.4.19 업무보고시)
“선박금융시스템을 강화할 것”

- '14년 만기가 도래하는 대형선사의 회사채(약 8,600억원) 차환 및 P-CBO를 통한 중견·중소선사의 신규 회사채 발행 지원
- 관계 부처 합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운보증기능 도입 방안 마련('14.上) 및 설립 결정 시 후속조치 신속 추진
 - * 해운금융포럼('13.12) 등 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조기경보시스템 도입('14)
- 일몰 예정('14.12)인 톤세제* 연장을 협의 추진하여 국적선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
 - * '05~'12년간 법인세 1.5조원 이상 절감, '04년 대비 국적선 2.1배 증가('12)

② 항만 하역시장 안정화로 항만물류 산업 정상화

대통령 지시사항('13.4.19 업무보고시)
“하역료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부두 운영회사 통합추진('14.12, 11개 → 9개)
 - * 자발적 통합 시 임대료 감면(1년차), 임대료 체계 개편(2년차~) 등의 인센티브 부여
- 하역요금 인하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권' 하역요금 신고제의 '인가제' 전환* 및 부두 운영회사 임대료를 물동량과 연계 산정
 - *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인가 요금 결정을 위한 하역요금 원가분석('14.1~)
- 항만 분쟁 예방·조정을 위한 「항만운송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항만하역시장의 고용안정과 차질없는 항만운영 달성('14.12)

3 FTA에 대비한 약점 보완 및 자신감 제고

국정과제 31-4 FTA협상시 농어민 권익 최대한 배려
대통령 지시사항('13.12.11 농축수산물 오찬간담회)
"FTA에 따른 피해 최소화·체질 강화 대책 마련할 것"

○ 기존 FTA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체계 내실화*('14.8)

* 지원 성과분석('14.5, 국회 보고) → 성과평가·환류시스템 구축('14.8) → 차년도 투자·융자 규모 등 조정·개선('14.9, 국회 제출)

○ 영연방 3국, 중국, TPP 등 신규 FTA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 방향 설정('14.2) 및 한·중 FTA 종합대책 초안 마련('14.12)

- 한·중 FTA를 계기로 중화권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수출 전진기지* 설립 등 수산업의 수출 전략산업 도약 방안 제시('14.10)

* 초저온 냉동시설 등 공동 물류 인프라 구축 등(청도, 5억원, 농식품부 협업)

○ 어업인 중심의 현지조사단 파견(연4회)을 통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업종별 어업인 지식 공유 전국대회 개최('14.11)

4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항만 경쟁력 강화

○ 항만 민자사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등 방안 마련('14)

-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지 지급금 발생 이전 저금리 자금 재조달 등 특수목적법인(SPC)의 파산 예방 및 경영 정상화

○ '컨' 부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하역능력 현실화 및 인프라 고도화 방안* 마련('14.12)

* 고단적 장치시스템, 장치장 고효율 레이아웃 방안 등

○ 장래 해운·물류환경 변화 대응전략, 정책수요자 관점의 항만재개발 수요 등을 검토하여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안) 마련('14.12)

- 특히 '항만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국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과 재개발 추진전략 등을 검토

나. 저성장 업종·신규 진입자를 위한 성장 사다리 구축

기 존	· 아이디어, 기술력이 있어도 자본부족으로 창업, 성장 부진	⇒	개 선	· 대기업과 영세·중소기업 동반 성장 · 풀뿌리 기업 육성
☞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책 용자, 세제, 시설현대화 등 종합 지원				

① 영세기업의 성장판 지원

국정과제 11-④ 수산식품산업 육성
국정과제 11-⑥ 해양산업 육성

- (해양심층수) 식품 이용범위 확대, 다목적 활용(농·수산, 레저 등) 유도 및 부담금 요율 인하(1% → 0.5%, '14.8) 등 제도 개선
 - 심층수 클러스터 조성 검토('14.下, 고성) 및 심층수 산업포털 운영
- (수산물 가공) 알찬 수산식품 기업 육성을 위한 「수산식품 산업 발전 종합대책」 마련('14.6) 및 천일염 산업의 성장 기반 구축
 - 지역별 거점단지(7개소), 영세 시설 현대화 및 운영자금 융자(240억원)
 - 염전 관리시스템('14.10), 시설현대화(124억원) 및 신물질 개발 지원
- (원양산업) 외국 기업과의 합작법인의 생산 물량에 대한 관세감면 및 신조 대체·중고어선 도입 등 영세선사*의 대외 경쟁력 강화
 - * ('12) 79개 선사중 자본금 1억원 미만 21개(27%), 어선 1척 이하 33개(42%)
 - 고금리 대출의 정책자금 저리(3%) 대환 등 융자 개선
- (연안해운) 선박 현대화 지원 확대 및 연안화물에 대한 전환교통 보조금·유류세 지원 등 영세선사* 경영 개선
 - * 718개 업체 중 자본금 10억원 미만 592개(82%), 선박 2척 이하 431개(60%)
 - 유류할증제 도입 등 여객선 운임체계 합리화, 선화주간 공생발전방안 마련 등

② R&D 기반의 기술혁신 및 산업 발전체계 고도화

대통령 지시사항('13.4.19 업무보고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세워 차질없이 추진”

- 「해양수산물과학기술육성법」 제정('14.上) 및 「해양수산물 R&D 중장기 계획」 수립('14.3)을 통한 미래지향적 R&D 투자 지속 확대
- R&D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화 센터 구축('14.1) 및 기술 인증제도 도입·시행('14.11)
- 산업 현황의 정밀 진단을 위한 해양수산물 국가 통계기반* 마련
 - * 해양산업 ‘특수분류체계’ 수립('14~'15) 및 실태 조사, 통계포털 등 구축, 수산업·수산물 규모 재조사('14.6) 및 표본 통계조사 실시('14.12)

③ 수산업의 '자본→창업→브랜드 개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 ‘창업의 A to Z’를 돕는 one-stop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추진('14.6)



- 모태펀드 출자*를 지속하여 민간투자 경험을 축적하고 동 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은 농신보의 예외보증** 대상 지정('14.4)

* '11년 이후 335억원을 출자하여 수산 부문 4개 펀드, 총 670억원 조성

** 보증한도 확대(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 30억원), 보증료율 0.2%p 인하

-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기업이 담보 없이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체계를 구축('14.6)하고 농신보 우대보증* 도입('14.4)

* 기술평가서를 보유한 기업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3%p 인하

다. 기업 애로 해소 및 규제 개선

① 복지 확충을 통한 고질적인 선원 구인난 해소 국정과제 10-2 해운·물류 산업 선진화

- 선원의 퇴직금 채권 보장 및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노·사 중심의 퇴직연금 공제제도 도입 유도

현장에서는

· 단기 계약으로 배를 옮길 때 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있음. 이 때문에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쓴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함(선원, 男, 48세)

- 선원 복지시설 운영 실태 조사('13.9~10) 결과에 따라 복지시설을 단계적 확충

* '선원의 날' 제정, 장기 승선원 포상 등을 통한 자긍심 고취

- 선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감독관의 단계적 증원 추진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 해외 근무 선원의 근로감독을 위한 재외 공관과의 협업 강화('14.6)

- 20톤 미만의 어선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선원 지원 및 발전방안 마련('14.10)을 통해 장기근무 등 수급안정 유도

② 외국인 선원 근로 조건 및 인권 개선

- 외국인 선원 도입 과정 및 고용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노·사·정 정책협의회 구성·운영('14.10, 어선, 상선 구분)

- 근로 조건, 권익 침해, 임금 체불에 대한 감독 강화('14.3)

- 연근해 어선원 송입업체 평가제*를 도입하여 기준 미달 업체 퇴출

* 이탈율, 송출비용, 민원발생 빈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종합평가 실시

③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

대통령 신년구상("14.1.6) "투자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음"

○ '13년 과제 중 미완료된 9건*(총 69)을 조속히 마무리

* 선박내 직무상 사고 등의 처리절차 신설, 바닥식 패류양식장 해적생물 제거용 도구 사용기준 마련, 선박안전법상 안전점검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축소 등

- 동시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제거' 미완료 과제 1건(총 7)도 차질 없이 완료

○ '14년 신규 과제 중 기업과 종사자가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과제를 별도 선정하여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

< 규제개혁 추진계획 >

① 경제활성화 (10건)

- 양식장 신규면허 대상 확대 및 양식면허 이전·분할 조건 완화
- 국제수산물관련 기관·단체 지정 및 지원
- 해양심층수이용 부담금 부과요율 완화
- 여객선 이용자 운임 지원 등

② 진입요건 완화 (10건)

- 마리나 사업자 범위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
- 어장정화·정비업 기술인력 등록요건 개선
- 마을어업 어장의 이용개발 확대

③ 수요자 중심의 인·허가 제도개선 등 (10건)

- 인·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구성
- 어선의 거래·임차에 대한 어선거래시스템 구축·운영
-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간소화
- 관상어 산업의 창업 지원 및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지정 등

라. 해양수산 유망산업 육성

기 존	· 고른 투자로 성장을 주도하는 추동력 발굴 미흡	⇒	개 선	·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성장을 이끄는 선도 모델 발굴
--------	--------------------------------	---	--------	----------------------------------

☞ 해양수산업 재도약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유망산업 집중 육성

①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전주기 역량 강화

국정과제 11-⑥ 해양신산업 육성
대통령 지시사항('13.4.19 업무보고시) "해양
플랜트 산업, 산업부와 협업방안 만들 것"

* 기술 현황 : 조선 3사는 세계 1위의 해양플랜트 건조 기술을 보유한 반면,
중소 전문회사 중심의 설계·기자재·서비스 분야는 경쟁력 취약

○ 심해 공학수조*,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및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14.1) 등 설계·기자재 기술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연구동·Pre-Feed 설계('13~'15, 해수부) + 수조동('13~'15, 산업부)

** 핵심기술 개발, 기자재 국산화, 현장 인력 교육·훈련 등 전담('13~'15, 거제)

- 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운송·설치 엔지니어링 기술 및 운영
인력 양성을 시뮬레이터 개발 등 추진('14.4~, 기획연구)

- 발해만, 캄차카반도 등 동아시아지역 해양플랜트의 수리 등을 위한
해양플랜트 수리단지의 입지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14.12)

○ 해외 항만 협력사업 지원과 병행하여 전 세계 3천여개(아태 617개,
152억\$)에 이르는 해체시장 진출 추진

- 국내 기업 진출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한 R&D 및 해외 중소기업체
M&A 지원 등을 위한 국제금융(IBRD, ADB) 활용 방안 검토

○ 산·학·연·관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진출지원 협의회」 구성*을
통해 서비스 분야 선도사업 발굴 등 지원

* 조선소의 건조 경쟁력, 석유·가스공사의 구매력 활용 등을 위해 산업부와 협업

② 해양 신재생에너지·자원 개발 기술 상용화

국정과제 11-⑥ 해양신산업 육성
국정과제 11-⑦ 경제영토 개척

○ (해양에너지) 핵심 원천기술* 및 복합 이용기술 개발('13~'15)

* 능동제어형 조류발전('11~'16), 진동수주형 파력발전('03 ~'15), 해양심층수 냉·난방/온도차발전('10~'15), 풍력-파력 연계발전('13~'15)

○ (심해저 광물) 망간단괴(태평양), 해저 열수광상*(인도양) 정밀탐사 및 기술** 개발, 망간각(서태평양) 탐사광구 등록을 위한 실험역 탐사

* 국제해저기구(ISA)와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광구에 대한 탐사계약 체결('14.上)

** 양광시스템 실증시험 및 통합 채광시스템 관련 기술개발 등('14.下)

○ (해양바이오) 신소재·에너지·환경보전 등 상용화 기술 개발(민간 기술이전) 및 해양생물 유전체 분석* 추진

* 포스트 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8년간 총 672억원, '14년 55억원)

- 지역 특성별 맞춤형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지방대-지역 해양 바이오센터-지역 중소기업' 연계의 지역해양바이오사업 추진

③ 양식업의 미래전략 산업화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

국정과제 11-①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대통령 지시사항('13.4.19 업무보고시)
"양식산업 R&D 투자로 기술선도"

○ (ICT융합) 고품질·친환경 수산물의 대량생산을 위해 BT, IT 등 첨단 기술을 융복합한 바이오플락(Biofloc)* 및 빌딩양식** 기술 개발

* 육상양식시설 7개소('14) 및 야외양식 시범사업 1개소('14)

** 빌딩양식 기술 연구('14) → 시험모델 개발('16) → 실증모델개발('17~'20)

○ (종자) 수산 종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종자개발 R&D 강화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추진('14.12)

* 골든시드 프로젝트 : 수출용 4개 종자 개발('14. 69억원, ~'21. 총 748)

○ (사료)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해 고품질·고효율 배합사료 개발 R&D 강화* 및 사료 수입원료 관세 인하 등 제도 개선 병행

* 사료개발 : ('13) 4종, 8억원 → ('14) 4종, 12억원

- (질병) 항생제 사용 저감을 위한 백신개발 연구* 및 질병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방역센터** 지속 확충('14.12)

* 수산백신개발(10년간, 100억) : 혼합백신 개발 등 기초연구('13~'15), 응용·산업화('16~'22)

** (~'13) 7개소(동·서해, 중앙, 남동해, 제주, 남서해, 해조류) → ('14) 1(내수면)

4 선박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 성장 도모

국정과제 10-2 해운·물류산업 선진화
국정과제 11-2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 민간 선박관리업과 관련 기업의 성장 지원

- 현지 설명회 등 공세적 마케팅을 통한 日 시장 진출확대('14.7),
및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선박관리 정보시스템 구축('14.12)

* 일자리 효과 : ('14) 14,364개(신규 438개) → (~'17) 15,704(신규 1,968)

- 노후선박 신조대체*를 통한 중소 조선업과의 동반 성장 도모

* 연안 여객선, 연근해·원양어선 등

- 표준선형(어선) 개발 및 중소조선 협의체(중소조선소, 산업부) 운영('14.6)

5 선박안전·환경 국제규제를 이용한 新해사산업 육성

국정과제 10-2
해운·물류산업 선진화

- 선박평형수 기술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민·관 협력 확대

*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14.7) 및 기술력 홍보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14.9 부산)

- '18년부터 국제적으로 시행 예정인 e-Navigation 핵심기술의 국산화,
국제 표준화 등 세계시장 진출 기반 마련

* ('13.8~'14.2) 기획연구 → ('14) 예타 → ('15~) 개념설계,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마.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

기 존	· 폐기를 위한 기술과 방법 개발에 초점	→	개 선	·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이용 극대화
--------	---------------------------	---	--------	------------------------------------

☞ 해양 폐기물 처리, 온실가스 저감 등 친환경 기술 개발 역량 제고

① 폐기물 이용 등 친환경 기술 개발·보급

- 생분해성 어구 이용 및 낚시용 납추 대체 촉진* 등 친환경 기자재 개발·보급 확대로 관련 산업과의 동반성장 도모

* 친환경 낚시도구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운영자금 지원(이차보전)

- 항만 개발 시 대량 발생하는 준설토(연 31백만 m^3)를 해양환경 복구 또는 他 용도*로의 재활용 방안 마련('14.12)

* 인공 해변·습지, 인공섬 생태공원, 침식해안 복원, 건설용 자재 등

- 방충 약품 사용 최소화 등 투기장 내 친환경 방제공법 개발 ('14.6~, 부산신항 시범사업)
- 항만-어항 간 광역 준설토 투기장 공동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및 환경피해 최소화(전국 5개소)

* ('14) 광양항 광역투기장 예타, 인천항 광역투기장 입지 검토 → ('15) 실시 설계 → ('16~'20) 공사 → ('20~) 준설토 투기

②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국정 과제 10-② 해운·물류산업 선진화
국정 과제 11-⑥ 해양신산업 육성

- 선박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선박 시험·인증·표준화 시스템 및 시험인증센터 구축('14.7) 등 추진

- 친환경 해상물류 실현을 위해 LNG 내항선 대체건조 지원방안 마련 (환경부 협업)

* 국내 내항선(여객·화물) 대체수요: 향후 20년간 6조원 규모 예상

- 연료 소모가 일반 어선의 1/10 수준인 소형어선 전기 엔진 교체 사업 추진 (40척 교체, 국비 6억원)

- 제주 파력발전소('14.8 완공) 250kw급 2기의 건설을 통해 발전효율 최대화 등 천해용 파력발전 기술 확보 추진

* '14.8월 준공이후 시험운용을 거쳐 천해용 파력발전 기술 확보('15.6 예정)

< 정책 추진 배경 >

◆ 정책 목표(국정과제와의 연계성)

- 해양수산 기업 해외진출 지원(11-2, 5) 및 해양 경제영토 개척(11-7)
- 항만·물류 진출 등 남·북·러 3각 협력·유라시아 외교 추진(127-2)

◆ 정책의 가치

- 극지 진출 등을 통해 국민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 제시
-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유라시아 협력 확대
 - * 대통령 말씀('13.10.18) :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개방으로 평화롭게 교류하며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를 건설해야.
- 우리 기업의 진출을 통해 해외에서도 경제활성화의 동력 확보
 - * 대통령 말씀('13.6.29, 訪中 시) : 중소기업들이 이제 국내시장을 넘어서 해외에 나가 성공을 거둬야...정부도 해외 진출 정보 등 지원 많이 해야.

◆ 장애요인 및 해소 방안

- 기후·국제 역학관계 등에 따른 극지 진출 애로 및 유라시아의 관문인 러시아의 투자 불확실성
 - ⇒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 인프라 확충, 對러 항만 투자협력 등 거점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
- 해외 정보 부족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
 - ⇒ 해외정보 제공, 컨설팅, 원조사업 확대 및 글로벌 리더쉽 제고 등을 통해 편안한 해외진출 환경 조성

가. 극지 진출 역량 강화

기 존	· 극지 진출 위한 이행계획 및 과학기지 등 기초인프라 구축	⇒	개 선	· 기업 진출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현장형 실용기술 개발
--------	-----------------------------------	---	--------	---------------------------------

☞ 극지 영향력 확대를 위한 과학연구 활성화 및 비즈니스 모델 마련

① 극지 진출 기반 구축 국정과제 11-⑦ 경제영토 개척

- 「북극정책 기본계획*」 후속 조치 이행, 「극지활동진흥법」 제정('14.上) 및 극지 정보센터 구축('14.下)

* 북극정책 협의체 구성 등 국제협력 강화, 제2쇄빙 연구선 기획연구 등 과학 조사·연구 확대

-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14.2) 및 지질·빙하 등 연구(40억원) 강화

* 남극 항해용 잠정판 해도제작 완료('14.1), 향후 추가조사를 통한 정식해도 간행 및 해양지명 등록('14.12, IHO)

② 극지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초저온 환경 적응, 최적항로 탐지 등 안전 운항을 위한 선박·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을 위한 R&D 추진('14~'18, 90억원)

* IMO의 극지운항 선박코드 제정('16)에 대비한 국내 안전기준 개발('14.12)

현장에서는

· 빙하, 바람 등의 극한 날씨에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정부에서 개발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선장, 男, 50세)

-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거점 항만 육성전략 마련('14~'15)

- 동해권 항만*은 러産 자원 수입·중계무역 허브항 및 부산·광양항은 남북항로 비중 확대 등 아태 지역 '권' 환적 거점으로 육성

* 예) 동해·묵호·삼척항(석탄), 포항항(철광석), 울산항(가스·원유) 등

나. 유라시아 新물류 루트 구축

기 존	· 대륙철도 등 북방물류루트 활용 미흡	⇒	개 선	· 해상운송 · 항만과 연계한 복합 물류체계 강화
--------	--------------------------	---	--------	--------------------------------

☞ 동북아 복합물류체계 강화 및 거점 국가 협력 강화

① 유라시아 물류망 구축

국정과제 127-② 유라시아 협력 확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발표(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개최식)

- 태평양* - 동북아 - 유럽 - 북극항로를 연계할 新 해상 물류계획 수립('14.12)

*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등으로 메가 경제블럭 형성 예상

-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운항선사 인센티브* 제공 및 북극해 연안 국가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新해상운송 비즈니스모델 발굴

* 항만시설 사용료 50% 감면, 화물량과 연동한 볼륨 인센티브 등('14~)

** 러시아, 노르웨이 등 북극연안국가와 협력회의, 세미나 및 공동연구 추진

- 대륙철도 ↔ 해상운송(극동 항만 ↔ 국내항만)을 잇는 복합물류망을 구축 하고 러 · 몽골 · 흑해 등 관련국가에 해운 · 물류기업 진출 지원

② 거점 국가와의 협력 강화

국정과제 127-② 유라시아 협력 확대
한-러 공동성명(정상회담시) “극동지역에서의 항만·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방안 함께 모색”

- (러시아) 대륙 철도의 관문인 극동 항만 개발협력*(12.5억원) 및 물류단지 조성('14.12, 기본계획) 등 전방위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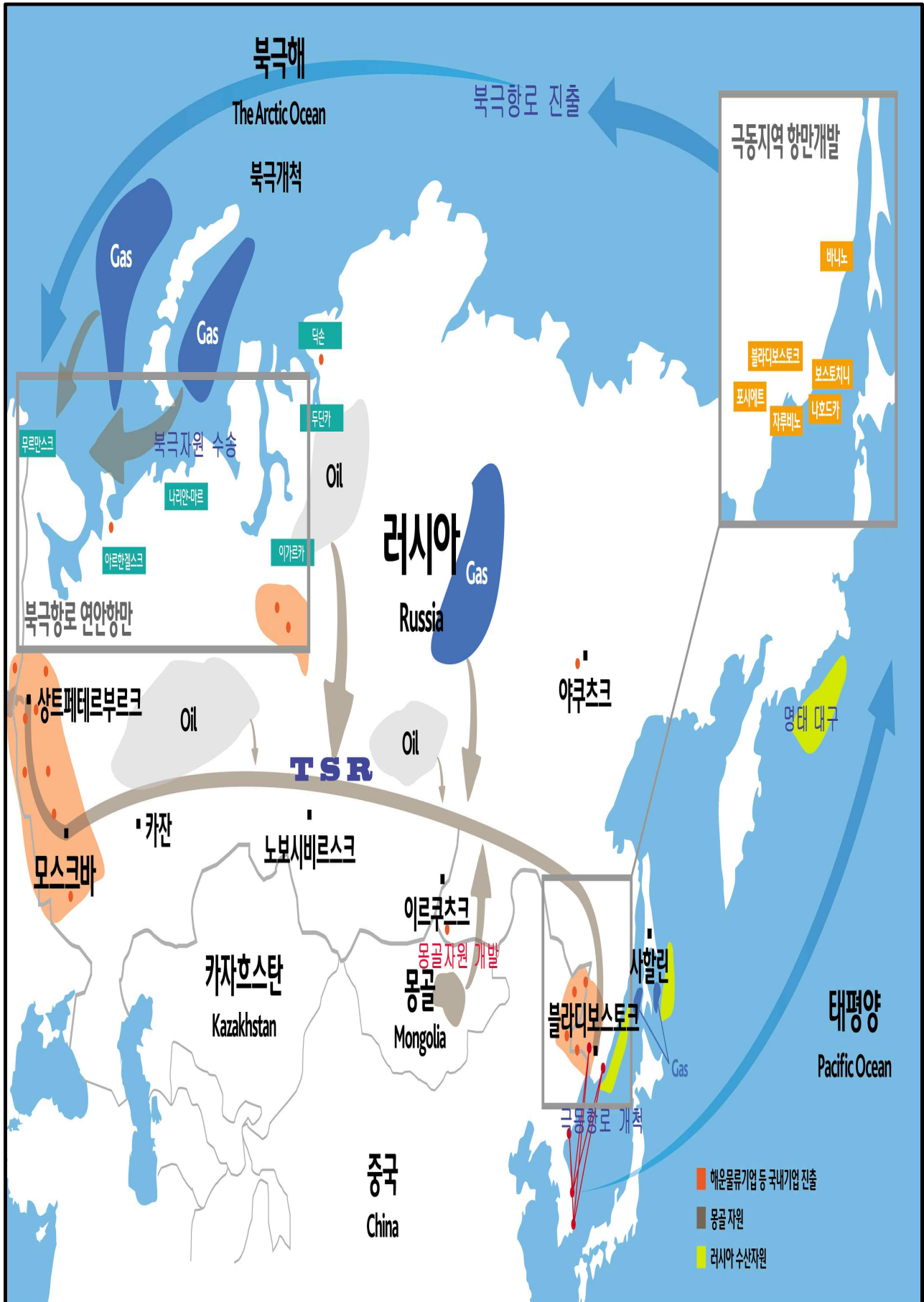
* MOU체결('14.1), 극동항만개발협력 기본계획수립('14.4~)

** 극동 러시아 물류 네트워크 구축 연구, 유라시아 물류 비즈니스 포럼 · 국제세미나('14.下)

- 물류 · 항만 투자협력과 연계하여 러시아와의 EEZ 입어 협상 구도를 상호 주고받는 협력 관계로 전환

- (몽골) 해운 합작회사 설립, 자원운송 시범사업 실시, 물류시설 개발 및 몽골인 해기사 양성 등 패키지형 해운물류 협력 추진('14.下)

< 해양수산 유라시아 협력 구상도 >



다.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기 존	· 개발협력 사업 이후 국내 기업 진출과의 연계 부족	⇒	개 선	· 기업 수주활동 지원 강화 및 지원사업 범위 확대
--------	----------------------------------	---	--------	---------------------------------

☞ 수주지원단 구성·운영, 정보 제공, 컨설팅 등 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① 국내 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항만 집중 투자

○ 항만 개발협력 사업의 既 지원국 중 본사업 발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14.4 구성) 활동 강화

- 알제리 알제·안나바항, 페루 마르코나항 등의 현대화 사업 수주를 위한 고위급 파견, 초청 연수 등 세일즈 지원

* (알제리) '20년까지 3개항 40.9억\$ 예상, 2차 협력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등 협력 강화로 수주 도모, (페루) '14.2월 항만 개발협력 사업 종료 후 사업화 추진

○ 방재시설, 해양플랜트, 항만 운영 등으로 협력사업을 다변화

- 태풍·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필리핀 방재시설 F/S 실시(3억원) 및 ADB, IBRD 등 국제 금융기구의 개도국 협력사업 적극 참여

* F/S 완료 이후 국제금융 조달을 통한 본 사업화 방안 등 모색(기재부 등 협의)

② 신규 해운시장 개척

○ 풍부한 자원, 수송 요충지에 위치하여 국내 기업의 관심이 높은 흑해 연안(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등과의 협력 추진

* 한-조지아 해운협정 체결('14.1), 한-터키, 아제르바이잔 해운협력 추진('14.下)

○ 인도의 해운 소득 과세방식 개선*('14.1), 일본-대만 항로 개방 등 국적선사의 해외 시장 진출 장애요소 제거

* 국적 선사의 인도 내 해운소득에 대한 세금 100% 면제(기존 10%면제,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대만과 해운협력 회의 개최('14.上)

3 글로벌 물류 거점 확장

국정과제 10-2 해운·물류 산업 선진화

- 해외법인 설립, 물류시설 설치, 현지 M&A 등 유망사업 발굴·지원 및 투자전략 수립 시 타당성 조사 지원('14. 4억원)
 - 국내 물류기업과 글로벌 제조업체(화주)가 해외 시장에 동반진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14. 1.8억원)
 - 물류-화주기업 매칭, 컨설팅* 및 포털 구축 등 정보 제공('14.12)
- * 무역협회 내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 설치·운영('14.1~, 국토부 협업)

4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협력 강화

국정과제 11-5 안정적 수산물 식량생산체계 구축
대통령 지시사항('13.12.11 농축수산물 오찬간담회)
“농어업분야 해외진출 관련 원활한 정보제공”

- 적지 조사와 정보 제공을 통해 양식, 가공, 유통 등 해외 생산시설 확보 지원(2개소)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3.6억원)
- 국제수산기구·연안국과의 남북극 수산자원 공동연구 등 해외 신어장 조사(22억원) 추진 및 일본·러시아 EEZ 내 안정적 입어권 확보 주력

5 압도적인 품질 우위를 발판으로 '수산식품 韓流' 붐 조성

국정과제 11-4 수산 식품산업 육성

-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부산 감천항)의 운영내실화*를 통해 국제 수산물 수출 Hub단지로 육성 추진
- * 신제품연구실, 포장디자인센터, 수출입정보센터 등 지원체계 구축·운영('14.2)
- 최대 소비지로 부상하는 중국 현지에 수출-마케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고품질 수산식품의 우수성 홍보('14.下, 수협)
 - 수출 환변동 보험(5억원) 및 중소 수출업체 융자 지원(1,300억원)

라. 해양수산 글로벌 리더십 제고

① 개도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원조사업 발굴·추진

국정과제 11-②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 여수프로젝트 시범사업('10~'13, 24건) 평가 후 본 사업* 추진('14.3)
* 국제심포지엄, 여수 국제아카데미(3주 과정), 개도국 제안과제 지원 등
- FAO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한-FAO간 공동연구 추진 IMO 기술협력 및 공무원·세계해사대학 재학생 초청연수 등 개도국의 인적역량 개발
- 생존 필수 물자지원 및 항로 표지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②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강화

- 해양환경 국제기구 사무국(COBSEA, YSLME) 유치 및 인력 파견
- IMO A그룹 이사국 7연임('13.11) 성과를 이용한 국제기준 대응 강화
* e-Navigation,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온실가스 감축기술, 극지 운항기준 등 중점 대응
- 국내 전문가·청년의 해양수산 국제기구(약 70개) 진출 지원*
* 청년 인턴 등 진출 확대방안 시행('14.3), 국제기구 공동 채용 설명회·박람회 개최('14.下) 등을 통해 '13년 22명 → '17년 50명 이상으로 확대

③ 미개척 지역에 대한 협력 기반 마련

국정과제 11-②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 (남태평양) 해수면 상승, 식수·전력난, 수산·해양생명 자원 개발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 협력 등 추진('14.4~)
*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태평양도서국포럼과 대화·협력 채널 구축('14.3~)
- (아프리카) 개발 경험 및 수산·양식기술 전수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등 빈곤 퇴치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14.4~)

< 정책 추진 배경 >

◆ 정책 목표(국정과제와의 연계성)

- 해양 공간을 국가·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재창조
(국정과제 11-3·8, 31-2, 34-4, 52, 95-3, 116)

* 삶의 터전인 연안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쇠퇴 ⇒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적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수준의 격차가 지속

◆ 정책의 가치

- '잊혀진 영토'인 섬을 정책대상으로 편입, 거주·소득·복지 개선, 자원 보호 및 해양영토와 국가 안보 수호의 중추로 관리
- 항만, 어촌·어항 등 해양수산업을 중심으로 연안소재 지자체와 함께 臨海 지역을 경제 혁신의 불씨로 육성

* 신년 기자회견(Q&A)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발전 전략을 잘 짜야 하며...정부에서는 최대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화 전략을 계획 중

◆ 장애요인 및 해소 방안

- 해양관할권 강화사업에도 주변국의 관할권 훼손시도는 여전히 하며 개별적·산발적인 정책으로 전략적 접근이 부족

⇒ 도서지역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영토로서의 본연의 가치 극대화에 중점

- 항만과 어촌·어항이 고립되어 성장 한계에 직면

⇒ 항만은 배후 도시와 연계된 광역 경제거점, 어촌·어항은 인접 지역의 복지·문화·교육 거점화

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서 관리 강화

기 존	· 경제성 우선 고려 · 여객선 등 교통 인프라 개발 위주	⇒	개 선	· 도서의 가치 주목 및 극대화 · 도서민 거주 환경 종합정비
--------	-------------------------------------	---	--------	---------------------------------------

☞ 소득·복지, 해상교통 등 도서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① 새로운 해양영토 거점으로서 도서 관리·이용 확대

국정과제 11-8 해양관리
국정과제 95-3 무인도서관리유형 지정

- 해양영토의 최외곽 침범으로서 도서와 그 주변해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서종합관리방안' 마련('14.4)
-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완료('14.12) 및 개발 가능 도서에 대한 현황도(16개소) 제작 등 유형별 관리기반 구축

* 전체 2,693개 중 1,340개 기 지정(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 영해기점 도서(23개)에 대한 기본도 제작(~'15)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17)하고 미등록 무인도서의 지적공부 등록 추진(~'15)

② 최외곽 도서 관리를 통한 해양영토 수호

국정과제 11-8 해양관리
국정과제 95-2 해양보호구역 지정

- 독도영유권 강화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광자원화 등 '과학적 관리' 강화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14.4, 관계부처 합동)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체류형 연구기능 강화 및 경비용 대형 함정 전담배치(1척) 등 긴급상황 대응체계 구축('14.3, 국방부·해경청 협업)
- 해경부두(500~5,000톤급 11개소), 어업지도선 부두(5개소) 및 해군 부두 신설 등 국가관리연안항 개발 추진

* '14년 주요사업 : 울릉사동항 방파제('14.2 착공) 및 용기포항 방파제 연장(195m, '14.6 착공), 추자항 해경부두 신설('13.10~'17.10)

③ 도서민의 소득·주거 안정 장치 마련

국정과제 11-①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국정과제 31-②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대통령 지시사항('13.4.19) “양식산업에 과감한 R&D투자”

-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마을 어가(23,704호)를 대상으로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확대

*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부당 수령 예방시스템 구축('14.12)

- 수출 전략 품목(전복, 해삼 등)의 대량 생산을 위한 양식섬* 조성

* ('13) 시범 7개소 → ('14) 예비타당성 조사 → ('15~'17) 본사업 16개

- 무의(無醫) 지역 병원선 운영을 위한 기준*, 낙도 특화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낙도지역 어업인 등의 정주여건 개선 등 복지향상 방안” 마련('14.9)

* 병원선 운영의 법적근거(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의 일몰도래 폐지('12.8)로 무의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④ 도서 주민에 대한 해상교통 복지 확충

-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범위를 차량 운임까지 확대('14.7)
- 낙도 보조항로 서비스의 공공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항로 운영 관행 등 운영체계 개선 방안 마련('14.6)

나. 연안을 경제활성화의 전략거점으로 육성

기 존	· 해양수산 고유의 기능 강조 · 내수, 기수역 등의 사각지대	⇒	개 선	· 배후 도시 및 지역과 연계 발전 · 사각지대 관리로 공간이용 극대화
☞ 배후 지역과 연계된 권역별 통합 관리전략 마련				

① 권역별 해양경제 육성 마스터플랜 마련

국정과제 10-② 해운·물류 산업 선진화

- 항만 권역을 해양플랜트, 조선 등 해양수산 거점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한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 추진

-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14.1~),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도입 필요성 · 타당성, 기대효과, 대상항만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4.4~12)

○ 생활, 문화 및 친수 공간이 어우러진 지역 · 주민 친화적 서비스 공간으로서 **2종 항만배후단지 조성**

* 시범 항만 선정 · 개발 및 항만 친수 · 문화공간 개발계획 수립('14.12)

2] 5대 메이저 항만의 국가 · 지역 산업 지원 역량 극대화

대통령 지역공약(울산) "동북아 오일 허브를 성공적으로 추진"
대통령 지역공약(인천) "항로 수심을 최소 16m로 확보"

○ (부산항) 피더 전용부두 개발, '컨' 부두 기능 강화 등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 및 원스톱 서비스* 항만으로서의 위상 강화

* 유류중계기지 추진방안 마련('14.上), 수리조선단지('14.下) 및 LNG 벙커링 기지('14.12) 계획 수립

- 釜慶권 제조업(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등) 지원을 위한 일반부두 등 기본계획(안) 마련('14.12)

-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거쳐 '토도' 제거 및 항입구 항로폭 확장 계획 수립 등 통항안전성 개선방안 마련('14.6)

* 선박대형화 및 통항선박 증가를 감안, 선박조정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반영 하여 최적의 항로 운영 방식 및 항로 정비 사업계획 마련

- '부산항 POST 2020'을 위한 신항 3단계 기반시설 사업 추진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14.12)

○ (광양항) 항로 정비·준설 등 체선율 감소 및 통항 안전성 향상

- 원활한 역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수 신북항 착공('14.10) 및 비료 공급 등 농업 지원을 위한 낙포부두 개축을 위한 예타 추진

- 묘도 준설토 투기장을 에너지 · 물류 등 복합 산업단지로 조성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14.7)

○ (울산항) 오일허브 2단계를 본격 추진*하여 국제 위상 강화

* 북방파제 준공('14.7, 1단계), 남방파제 2단계 지속 추진, 남항 방파호안 실시설계('14.11)

** 위해요소 발굴·개선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 T/F 구성('14.2)

○ (인천항) 對中 교역 거점항으로서의 역할 제고 및 국제여객부두 개발

- 북중국 노선 대형선의 유치를 위한 신항 중심 준설(타당성재조사중) 및 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한 크루즈부두 임시 개장(8만톤급, '14.9)

○ (평택·당진항) 중부권 산업거점항 및 서해 해상 치안능력 제고를 위한 관리부두 완공, 배후단지·진입도로·해경부두 등 지속 확충

* 민자 추진이 곤란한 국제여객터미널은 수요 재예측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 재검토

③ 어촌·어항의 소득창출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

국정과제 11-③ 어항기능 고도화
국정과제 12-① 농식품의 6차산업화

○ 유·무형 자원 활용, 1·2·3차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소득원 창출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제2의 새마을·새어촌」 사업 착수

- 6차 산업화 계획 수립 및 마을공동체 주도의 시범사업 실시('14.8, 5개)
- 체계적인 공동체 육성, 어촌사회에 배려와 나눔의 정신 확산 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시행('14.2~)

○ 수산물 위생관리, 유통·가공 등 어항 기능 고도화 및 주변 지역과 연계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착수('14.10, 방어진·죽변·거진항)

- 관광·문화 등 다원적 기능을 갖춘 다기능어항 개발

○ 어촌 소득원 창출 및 도시민 힐링을 위해 자원·안전·환경을 고려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등 낚시산업 선진화 방안 시행

- 「낚시 진흥 기본계획」('13.12)을 토대로 낚시업자 전문교육 시행, 낚시 포털 운영, 친환경 낚시도구 개발·보급, 쾌적한 낚시공간 조성 등 추진

4 정책 사각지대인 내륙 공유수면과 기수역 관리체계 정비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절차, 실시계획 승인, 사용료 부과징수 절차 등 내륙공유수면 업무처리요령 마련 시행('14.1~)
- (기수역) 장마철 쓰레기 밀집, 오염으로 인한 어로 제한 등 민원이 빈발한 4대강 하구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14.8, 환경부 협업)

다. 빠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해상교통망 구축

기 존	· 제한된 수요, 육상 교통의 보조 수단이라는 인식으로 투자 미흡	⇒	개 선	· 육상 교통(KTX 등)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 제공
--------	--------------------------------------	---	--------	-------------------------------

☞ 수요자를 최우선 고려한 해상교통망과 인프라 종합 정비

1 연안 여객 2천만명 시대에 대비한 해상교통망 선진화 기반 마련

국정과제 34-4
연안여객운송사업 선진화

- 일반인이 편리하게 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로 지·간선 체계 도입 등을 포함한 해상교통망 선진화 계획 수립('14.6)
 - * 육-해상 교통연계 강화, 도서 여행시간 단축, 해상교통망 관리체계 정비 등 포함
- 여객선 이용객 지원, 선박·인프라 지원 등 도서지역 해상대중 교통 육성·지원방안 마련

2 수요자 중심의 해상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국정과제 34-4
연안여객운송사업 선진화

- 여객선 기항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상교통 DB*를 구축하고, 종합개선방안 마련('14.6), 열악한 기항지 집안시설 개선('14. 32억원)
 - * 여객선 기항지 339개소에 대한 시설 현황 및 개선계획 등 포함
- 연안여객 이용 시 편리하고 빠른 정보 확인·예약·발권이 가능한 인터넷·모바일 예매 시스템 개선 및 무인발권기 시스템 도입
 - * 3년간('13~'15) 33개 터미널에 53기의 무인발권기 도입 추진

라. 해양영토 관리기반 확대 및 조사역량 제고

기 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로 개별 수행 · 조사자료 비공개 · 관리자 중심의 해양조사 	⇒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先 거시 전략 → 後 미시 개발 · 자료 공개로 이용 극대화 · 수요자 중심의 조사 및 공개
--------	--	---	--

☞ 국가 해양관측체계 정비 및 정보 통합 관리 · 운영 · 공개

① 해양영토 관할권 수호를 위한 관리역량 강화 국정과제 11-⑧ 해양관리

- 주변국과의 해양관할권 갈등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관할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관할 해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4.上)
 - 관할해역 관리에 관한 중장기적 비전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방안이 담긴 '(가칭)해양영토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14.下)
- 관할해역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해경 대형함정 추가건조(3척, ~'16) 및 고속단정 확충(18척, '12~'14) 등 경비 인프라 확대

② 해양조사 내실화 및 과학적 관리체계 마련 국정과제 11-⑧ 해양관리

- 해양영토의 효율적 관리와 향후 해양경계 획정에 대비한 해양 지질조사('13~'20) 및 국가 해양기본조사*('08~'17) 지속 추진
- 입체적 해양조사를 위해 차세대 해양관측 위성 개발('12~'18) 및 관할해역 광역 감시망* 구축 추진(~'19)
 - * 정지궤도·저궤도 위성,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하여 불법선박, 해양오염, 재해·재난 등 실시간 해양영토 감시체계 개발
- 해양자료 통합관리망 구축, 정보 공개, 조사선 공동활용 등 해양 조사체계 개선방안 마련('14.上)

3 해양과학기지 중심의 해역별 관측체계 확립

국정과제 11-8 해양관리

- (서해) 방사능, 황사, 스모그 등 대륙기원 오염물질 및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해양과학기지 설치('14.10)
- (동해) 해양·기상·환경·지진해일 등 해양관측 정보생산을 위하여 해양과학기지 설치 검토
 - * 당초 위치에 대한 문화재촉 부결('13.5)로, 최적의 대안위치 재조사 및 검토 후 추진
- (남해) 이어도 기지의 활용 확대를 위한 체류형 연구 지속 추진('14.3~10)
 - * 기지 시설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14.3~8, 15억), 세미나 등 연구발표·국내외 연구기관에 관측정보 제공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14.12)

4 과학적 수산자원 조사관리 체계 확립

국정과제 11-11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11-2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대통령 지시사항('13.4.19, 임무보고서)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성장”

- (인프라) '17년까지 한반도 주변 해역의 자원 현황·변동의 정밀 모니터링*·평가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14.5)
 - * ('13) 75개(42km 간격) 정점 표본조사 → ('17) 500개(18km 간격) 정밀조사
- 자원조사선 1척 신조 및 전담센터 설립('14.3~)
- (R&D) 생태계 집중 모니터링 기술개발 등 수산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新자산어보 프로젝트”(‘15~’21/3,500억원) 예타 추진
 - * '14년 상반기 예타 통과를 목표로 기술성('14.2) 및 본 평가('14.3~8)에 적극 대응
- (종묘관리) 종묘의 열성화 방지 및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종묘 방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4.11) 등 「방류종묘 인증제」 도입기반 마련
- (자원관리) 어린 고기·자원량 급감 어종에 대한 금어기·금지 채장 신설('14.12) 및 산란·서식지 집중 조성('14.2)
 - 바다목장 6개소, 바다숲 2,374ha(여의도 면적의 8배) 추가 조성 및 바다 식목일('14.5.10, 완도)을 범국민 참여 제2의 산림 녹화사업으로 전개('14.2~)
 - * 도루묵, 대구의 성공적 자원복원에 이어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 ** 자원조성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등 지자체와의 협업시스템 구축('14.8)

< 정책 추진 배경 >

◆ 정책 목표(국정과제와의 연계성)

- 해양 안전사고(84-7), 기후변화 등 재해 대비, 사전 대응체계 구축(11-2, 41-1, 98, 99) 및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95)

◆ 정책의 가치

- 총체적인 해양 재난관리 체계 강화로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 국민안전 강화를 통한 국민행복 달성

-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관광, 레저, 스포츠 등 수요 창출을 통한 해양 서비스 산업의 성장

* 신년 기자회견 : 에너지 환경 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새로운 가치와 시장 창출 가능. 관광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

◆ 장애요인 및 해소 방안

- 해양사고 30% 절감(~'17) 노력의 민간 부문 확산이 느리고, 안전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추동력 확보 불확실

⇒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관리 관련 법령을 정비

- 수산물에 대한 불신 등의 사례와 같이 국민의 근심을 해소시키는 노력 미흡

⇒ 재난·재해와 식품안전,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조사 역량 확충 및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

⇒ 국민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사전에 이해와 설명을 드리는 등 일하는 방식 개선

가. 현장·생활 밀착형 해양안전 관리체계 구축

관	· 관 주도	⇒	개	· 민관 협업, 과학기술 활용
행	· 산업 현장 안전관리 중점		선	· 해양 이용자 모두를 고려한 관리

☞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 이행

① 해양사고 30% 줄이기 문화의 정착 유도

국정과제 84-7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대통령 지시사항('13.4.19 업무보고시) “선박안전사고를 줄여 바다오염·인명피해가 발생 않도록 노력할 것”

-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선박·시설 안전성 강화, 해상교통환경 개선 및 안전문화 조성 등 해양안전 종합대책 시행('14.4~)
 - 민·관 합동 T/F*를 통한 실태 점검·관리 및 계절별 안전 대책 시행
 - * 해수부, 해경, 지자체, 선박검사 대행기관, 선주협회, 해운조합, 수협 등 참여
 -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14.上), 해양안전 체험시설 타당성 검토 및 공익광고, UCC·웹툰 공모전('14.11)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캠페인 전개
 - * 공중파 방송사 등과 해양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MOU 체결('14.上) 및 해양안전 인터넷방송 추진방안 마련('14.上)
- 해양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1개 법안에 분산된 해양재난 관리규정 통합 추진
- 해적 피해 Zero 기조 유지를 위한 위협 해역 상시 모니터링, 선원 대피처 설치, 보안요원 탑승 권고 및 청해부대 지속 파견
 - * 국제기구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대한민국 선박 등의 해적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14.下)

② 유류 오염사고 대응체계 개선

- (유류부두 안전성 강화) 송유관 파손 시 자동차단을 위한 비상전원 안전설비기준 마련, 유류부두 충돌 시 경보발령시스템 구축 등('14.12)
 - * 유조선 접·이안 시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

○ (방제인프라 개선) 방제분담금 요율 상향 조정 및 부과·징수절차 개선*

* 실제 유류수령량 자료 요구 근거 마련(해양환경관리법 개정, '14.6)

○ (인적과실 방지) 도선사의 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재 2단계의 면허체계를 4단계로 세분화하여 전문성 제고

* 선박 이동경로, 속도, 예선배치 등 도선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도선매뉴얼의 법적근거 마련(「도선법」 개정, '14.12)

③ 안전 향행을 위한 해상교통안전 시스템 고도화 국정과제 84-⑦
법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 전국 18개 VTS 시스템(항만 15, 연안 3)과 본부 상황실의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 간 연계망 구축*('14.3~'16.12)

* ('14.3~12) 설계 → ('15~'16) 서남해·남해·동해권, 연안 VTS 등을 단계별 연계

○ 관제장비 국산화('16) 및 첨단 항로표지시설 지속 확충

○ 고의적 GPS 전파 교란, 태양 흑점 폭발 등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

- (항법시스템) GPS급 위치오차(8~20m) 구현 및 GPS 백업 시스템 확보를 위한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구축('13~'17)

- (DGPS) 기존 DGPS 정보를 소형선박의 사고예방을 위해 스마트폰용 해상 네비게이션 방법으로 기능 확대('14.10)

④ 항만 시설 정비를 통한 배후 도시와 국가 물류망 보호

○ 외곽 시설물*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종 및 2종 시설물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기재부·국토부 협업)

* 방파제·파제제 200m 이상(101 개소), 방파호안(9개소)

○ 해수면 상승, 폭풍·지진해일 내습 시 침수가 예상되는 배후도시 방재시설 설치(22개 항만) 및 방파제 보강(32개 항만) 추진('11~'30)

* '14년 : (방재시설) 마산·삼척·목포항 등 3개소, (방파제 보강) 여수항 등 71개소

- 지진 빈발 추세에 대비한 항만시설물 내진 평가·보강, 설계기준 강화 및 내진 관련 기준 재정비('14.12)

* 내진설계 미 반영 시설물 평가 완료('14.12, 486개소) 및 연차별 보강 계획('14.12)

5] **어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정과제 11-②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대통령 지사사항('13.8.13, 현장방문시) “적조피해 복구 등 신속히 지원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할 것”

- 적조·해파리 피해 저감을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 (적조) 예보체계 세분화(관심단계 추가), 주의보 발령 요건 확대 (300개체/ml → 100), 조기 모니터링 강화 및 예방 매뉴얼 보급('14.5)
 - 미래부와 협업을 통한 적조대응 R&D 강화*, 적조 상습피해어장에 대한 양식어장 구조개편(시설개선 120ha, 품종전환 75ha '14~'18)
 - * 해수부 : 연근해 모니터링, 적조발생기작 연구 등(연간 20억원)
 - * 미래부 : 양식장 적조방제 바이오·나노 벽구조 개발 등('13~'18, 80억원)
 - (해파리) 이동예측모델 개발('14.6) 및 로봇기반 방제시스템* 구축 추진
 - * 미래부 비타민 프로젝트 R&D 사업으로 추진('14.4~, 연간 10억원)
-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확대 및 가입률 제고
 - 보험 취급 품목 확대*(본사업 3종, 시범사업 3종) 및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
 - * 대상품목(본사업 / 시범사업) : ('13) 2/13 → ('14) 5(가두리어류 등) / 13(다시마 등)
 - 가입률 제고, 보험요율 조정 등을 통한 수지개선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활성화방안 마련('14.8)
-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한 어항시설 확충
 - * 장고항·이목항·남포항·노량항 4개 착수('14.6~), 대포근포항 완공('14.12)
- 어선사고 예방·신속 구조를 위한 실시간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14.12 서해안권, 동·남해안권 기 완료)
 - 사고 주원인인 노후기관 대체 및 장비개량 지원 확대('14.3~)

- 사고 이후 생업 조기 복귀를 위한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 (5톤 → 4톤 이상)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및 시행령 개정 추진('14.下)
-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업인의 재해보장을 위한 안전공제 보상 한도 증액(사망시 1억 원) 및 신규 상품 개발
- 요양급여 수령 어선원(연평균 440명) 대상 재활급여 시범사업 도입

나. 연안재해·식품안전 예방체계 확립

관 행	· 사후 대응 · 관련 정보의 제공 미흡	⇒	개 선	· 위해요소 사전 인지 및 대책 마련 · 사전 정보제공 강화
--------	---------------------------	---	--------	--------------------------------------

☞ 국민과 종사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사전 대응

① 연안 침식 대응 강화

국정과제 95-④ 기후변화 및 연안침식 대책 수립 시행

- 침식 심각지역에 대한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14.12, 시범 3개소) 및 침식 대응기술 개발('14. 21억원)
 - * 연안 모니터링 지속 확대('14, 250개소) 및 사후평가를 통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 남·서해 도서의 「해안침수 예상도」 제작('14.12, 29개소) 및 취약 시설, 대피소 등 재해·재난 정보 등을 GIS 시스템으로 통합·공개('14.12)
 - * '17년까지 남·서해안 115개소 재해 취약성 평가('14년 38개소)
- 연안침식의 심각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반영한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14.9)
 - 연안정비사업 자문단 구성·운영('14.2~) 및 연안정비사업 사후관리 · 효과의 점검·평가를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바닷가 실태조사('14.12, 육지부 완료)를 통한 맞춤형 관리유형 설정 및 위성 등을 활용한 비정상적 연안 이용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14.12)

② 안전한 해상활동을 위한 바다의 일기예보 등 활성화

- 조석예보 등 해양정보 전달을 위한 전문 인터넷방송(Webcasting) 시범 운영('14.上~)
-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부산 해운대·충남 대천 등 주요 해수욕장에 이안류 감시시스템 운영('14.6~9)
-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정보도, 요트낚시정보도(남해안) 및 사고 예방과 수색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3D 해양안전지도 제작
* '16년까지 전국 150개 해수욕장 지도 제작 및 어플 개발
- 소형 선박 안전사고(전체의 20%, 약 6만척) 저감을 위한 5톤 미만 선박 전용 항법 어플 개발·보급('14.10)

③ 국민 불안 제로를 위한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 강화

대통령 지시사항('13.9.17 국무회의)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 유통 우려 해소를 위해 철저히 관리할 것”

- 日 원전사태, 中 해안 원전 증설 등에 대비한 해양방사성 물질 감시센터 설치·운영('14.6, 원자력안전청 협업)
 - 조사 빈도 강화, 조사 기관별 역할 분담, 정보·장비 공유 등 협업 강화, 방사성물질 거동연구 및 예보체계 구축 기반 마련('14.6)
- 우리나라 주변 해수 방사능 검사(21개 지점, 분기별 조사) 및 제주 남부 등 6개 지점 특별 조사* 연장
* 제주 남부 4개 지점은 월 2회, 울릉도 북부 2개 지점은 월 1회로 강화
- 국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검사 횟수 (656회 → 700) 및 대상 품목(17품목 → 20) 확대

④ 수산물 생산에서 식탁까지 안전·위생 관리 강화

국정과제 77[5] 식품안전정책 정보제공 확대
국정과제 77[7]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대통령 지시사항('13.9.17 국무회의) “수입검사와 유통단계의 원산지 표시 관리 더욱 철저히 할 것”

- 육·해상 오염원 노출 개연성이 있는 생산해역 위생관리 강화('14.9~)

- 지정해역 위생관리 적용 대상 확대(수출용 → 내수용), 전 해역의 등급화 및 등급별 맞춤형 위생관리 방안 도출

○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 행위 감시 강화 및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심 정보 제공('14.1~)

* (현행) 글자 표기 → (개선) 수입산은 식별이 용이토록 노란색 바탕 표시

○ 수입산과의 차별화 등을 위한 수산물이력제를 활성화('14.1~)하고 특히, 국산과 생산이 중첩되는 일본산 수산물 중점 관리

* 대상품목(7개) : 고등어 · 갈치 · 명태 · 꽁치(일본산 중복) · 조기 · 넙치 · 전복

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조성

이 전	· 기 발생한 오염원 처리 및 사업 집행관리에 중점	⇒ 개 선	· 사업의 사후평가 등을 통한 오염의 근본 원인 해소 및 예방
☞ 예방적 해양환경 관리 및 정화·복원을 통한 해양생명자원의 자산화			

① 사전 예방적 해양환경 관리체계 구축

국정과제 95-②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국정과제 95-④ 기후변화 및 연안침식 대책 수립시행

○ 해양투기 제로화에 대비한 배출해역 정밀 모니터링, 배출 축소, 오염구역 복원 등 종합 관리방안 마련('14.11)

* 동시에 투기 가능 준설토의 육상 재활용 지침 마련('14.12)

○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한 해양수산 기후변화 종합대책('14.下) 수립

○ CCS 센터 설립('14.9) 및 해양 지중저장소 시추계획('14.12) 등 CO₂ 저장기술의 실증화 기반 구축

○ 침몰선박('13.9월 기준 2,030척) DB 구축,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추가 유류 오염 가능성 파악 및 처리 대책(잔존유 회수, 인양 등) 수립('14.10)

○ 해양생태계 교란·유해생물의 발생 및 확산 매카니즘 분석 등 관리기술 개발('13~'21)을 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기반 마련

○ 「해양환경관리법」을 기본법 및 분야별 개별법 체계로 개편

②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정화·복원

국정과제 95-②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및 갯벌복원

- 침적쓰레기 관리계획 수립('14.11) 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효율성 제고
* 사업절차 : 2단계(조사·수거) → 4단계(계획·조사·수거·평가) → 환류
- 해양생태 등급도 작성·고시 등 해양 생태계 건강성 진단('14.11) 및 갯벌 환경 개선(고흥, '14.3) 및 물길 복원(강화, '14~'16) 추진
-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확대(20개소 → 40) 및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SNS 등 다중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 추진
- NGO 등과 연계하여 연안대청소(연5회) 실시, 「2014 NOWPAP ICC 워크숍」 및 연안정화의 날 개최 지원('14.10) 등 추진
- 부산 남항 등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14.12)하고, 진해 행암만·장생포항(실시설계) 등 오염해역 신규사업 추진
- 폐어구 해상투기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 등 방지를 위해 어구의 생산단계에서 폐기까지의 종합관리 체계 구축('14.12, 법령안 마련)

③ 해양 생태계 보전·관리 및 생명자원의 국가 자산화

- 백령도 및 울릉도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14.11)
- 분단 이후 최초의 한강 하구, 해양 DMZ 등 특수 지역* 해양생태계 조사('14.11, 시범조사, 국방부 협업)
* 남북 접경해역, 해상 사격 구역 및 대규모 개발 이후 방치 해역(시화호, 새만금 등)
- 동·서·남 해역별 대표 해양생물(물개, 물범, 돌고래, 바다거북)의 증식·복원('14.7~) 및 보호 대상 해양생물의 보전계획 수립('14.11)
- 나고야의정서 발효('14 예상) 등 생물자원 주권화에 대응하여 종 보존·관리를 위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시범운영('14.4, 서천)

라. 불법어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관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온정주의 및 정부 단독 대처 · 中 어선 대응 : 단속 중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을 통한 합리적 해결 및 불법에 대한 강력 대처 · 中 어선 대응 : 퇴거와 나포 병행
--------	---	---	---

☞ 강력한 불법 근절체계 확립 및 협업을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해 조업질서 확립

- 中 어선의 불법조업 대처 전략을 나포 단속 → 퇴거와 나포 병행
 - 어업지도선과 해경 함정을 해상경계선을 중심으로 전진 배치하여 불법조업선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불응어선은 강력단속
 - * (現) 나포·압송 시 단속 공백 → (개선) 단속 불응 시 공백이 없도록 나포
- 한-중 협업을 통한 공동 감시·단속 체계 확립 및 인프라 확충
 - 한·중 정상회담('13.6) 및 어업공동체(13.10) 합의에 따른 양국 공동 순시, 준법조업 유인책 제공 방안 등 중점 이행('14.5~)
 - 제주어업관리소 신설('14.3)을 기점으로 3개 해역 관리체제로 개편하고, 기존 동·서해 어업지도선 재배치
 - * 중국어선 허가여부의 원거리 자동식별장치 시스템 개발(미래부 협업)

② 원양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책임 있는 조업국 위상 확립

-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조기 설치(의무화 기한 ~'14.7) 유도를 위해 미설치 선사 준법조업 여부 집중 관리*
 - * 항만국 검색 우선 실시,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시 항적 검사 철저 시행, 어업 허가서 유효성 확인 등
- 조업감시센터(FMC) 조기 운영('14.4)을 통한 원양어선 조업상황 모니터링 및 불법어업 방지
- 개정 「원양산업발전법('14.1~)」에 따른 강화된 처벌*을 적용하여 불법 적발 시 기존 용자금 회수 등 정책지원 제한조치 강화
 - * 벌칙 신설, 어업허가정지 및 해기사 면허정지 기간 상향, 과징금 한도 상향 등

< 정책 추진 배경 >

◆ 정책 목표(국정과제와의 연계성)

- 2천만 해양관광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정비 등 해양 이용의 패러다임 변화 유도 및 관광서비스 산업 육성(11-3, 115)
- 해양역사·문화에 대한 가치 재발견 및 국민의 해양의식 고취

◆ 정책의 가치

- 해양을 이용한 국민 힐링과 행복 및 지역 발전 실현

- * 해수부 소관 지역공약 7개 중 4개가 해양관광·레저와 관련
 - 경기 제부 마리나('15.12 완료), 서귀포 크루즈 터미널('15. 완료), 경남 해양레포츠 기술원 설립, 여수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등

- 해양관광, 레저, 스포츠, 특히 크루즈와 마리나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 *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 : 관광산업은 많은 분야가 총체적으로 결합한 대표적 융·복합 산업이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

◆ 장애요인 및 해소 방안

-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제정

⇒ 크루즈산업이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 선상 카지노의 사행성 조장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국민에게 적극 설명

- 외국 크루즈선 유치 및 마리나 이용 활성화

⇒ 항만 등 인프라 정비, 스토리가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 민·관 합동 세일즈 및 마리나항만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가. 크루즈·마리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확대

기 존	· 수요 발생 이후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장 선점에 미흡	⇒	개 선	·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요 견인 · 법, 제도 정비 및 인력 확보 병행
--------	--------------------------------	---	--------	---

☞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육성

① 크루즈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공

국정 과제 115-①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
대통령 지시사항('13.7.17,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시) “관계부처간 노력을 통해 관광산업 육성할 것”

* '13년 국제 크루즈의 입항 횟수 · 입항객의 급증 추세는 지속 전망

- 입항 및 입항객 : ('12) 226척, 28만명 → ('13) 413, 79 → ('14) 455, 91 → ('15) 500, 100

○ 크루즈육성 협의체('13.9~) 운영을 활성화하여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대책('13.7)」의 36개 세부과제 추진상황을 점검

*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 구축('14)

- 동북아 시장을 겨냥한 수요조사, 네트워크 구축, 제도개선 등 한·중·일 합동 「크루즈 활성화 방안」 마련('14~'16, 공동연구)

○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외국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민·관 합동 유치 설명회 · 팸투어 추진

*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해 '17년까지 총 일자리 2,878명 창출(순 일자리 1,394명)

○ '20년까지 8선석* 확충을 목표로 부산북항 10만톤급 1선석 완공('14.12) 등 인프라 지속 정비

* 인천(15만), 여수(15만), 제주(8만), 강정(15만 2), 부산(22만, 10만), 속초(3만)

현장에서는

· 크루즈선이 자주 들어오면서 장사도 잘되고 지역 경제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제주 지역 주민, 女, 43세)

2 쉽게 즐길 수 있는 마리나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국정과제 11-6 해양신산업 육성

* 마리나산업 현장 '17년까지 8천개, '20년까지 1만2천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

○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자 공모('14.7) 및 사업계획 수립('14.12)

* 기반시설 국비지원(개소당 300억 수준), 국내·외 투자유치(산업부·KOTRA 협업) 및 수상 급유시설 설치기준 제도화(소방방재청 협업) 등 병행

- 지역별 수요와 개발 규모를 감안한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14.12)

○ 마리나항만의 민간투자 촉진·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마리나항만 구역 내 배후단지(관광·요트산업 집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추진

* 사업자 지정요건 : 2개 → 1개 회사가 설립한 법인

- 선박 대여업·보관·계류업, 레저선박·시설에 대한 분양·회원 모집 근거 마련 등 투자 활성화 유도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인력 양성기관 선정('14.2) 및 한·중·일 국제마리나 네트워크 구축(~'15), 마리나 인턴 파견('13.11~'14.4, 호주) 등 국제협력 확대

나. 지역 경제의 싹틔줄이 되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기 존	· 관광과 레저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정비에 중점	⇒	개 선	·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병행
--------	----------------------------------	---	--------	---

☞ 지역 특성을 감안한 인프라 확충 및 레저·관광 상품 개발

① 연안의 해양레저·관광 자산화

국정과제 11-⑥ 해양산업 육성 및 연안유희지 휴양시설 조성
국정과제 95-⑤ 자연해안선 보전

- 연안 유희지를 활용한 오토캠핑장, 테마공원 등 국민 휴양시설 조성 선도사업* 지속 추진('12~'17)

* 7개소 : 시흥 갯골, 포항 구항, 울산 대왕암, 부산 송도, 고흥 용동, 함평 돌머리, 거제 궁농 등

- 마리나, 낚시공원, 해중레저공원(강릉) 등 해양레저 복합공간 조성
- 보전가치가 높은 해안의 연안 완충구역 지정(3개소) 등 연안경관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14.12, 「연안관리법」 개정(안) 마련)

②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항만 기능 정비

- 도서지역의 열악한 기항지 인프라 개선을 통한 항만의 여객 기능 활성화를 위해 여객항 제도 도입 검토

*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서 무역항, 연안항 체계로 운영중이나 이는 화물처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여객 운송기능 강화를 위한 여객항 신규 도입 타당성 검토

- '20년까지 공항 수준의 국제여객터미널 7개소 확충*을 위해서 '14년에 대산·제주항 터미널 개발 및 인천·속초항 설계 시행

* '20년까지 7개소 : 인천, 평택·당진, 대산, 제주, 부산, 포항, 속초

- 대도시 인접 항만의 재개발을 통한 국민 여가공간 확충
 - (부산북항) 국제여객부두(크루즈부두 포함)·여객터미널 준공('14.12) 및 1단계 재개발 지구의 친수공원과 랜드마크 추진 방안 마련('14.6~8)
 -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을 비지니스, 관광·레저, 시민휴식 공간 등 국제적인 대규모 종합관광·레저허브로 개발('14.6, 사업자 지정)

③ 해양레저 활동의 저변확대 및 지역색이 있는 관광상품 개발

국정과제 12-① 농식품의 6차 산업화
대통령 지시사항('13.4.19 업무보고시)
"수산업의 영역을 관광, 레저로 확대"

- 해중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 애로 해소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해중레저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14.6)
 - 어촌 소득증대와 연계한 해중레저 거점 마을 육성('14.8, 1개소)
- 디자인, 역사·문화 등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섬·어촌의 관광상품화
 - * 해양 테마마을 : 기본계획 수립('14.下) → 본격 조성('15)
 - 어촌 체험마을 : 기존 사업 개선방안 마련('14.6) → 6개소 확충('14)

④ 4계절 중단 없는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 해안 도보여행 활성화를 위한 해안누리길 정비 및 도보여행 루트 개발 및 홍보
 - 해안 도보여행자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안 도보여행 지원 센터(가칭)*' 시범 운영('14.下)
 - * 해안가 인근 편의점, 민박 등 지정 → 짐 보관, 안내 등 편의 서비스 제공
- 해수욕장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안전시설 보강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유도

⑤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

국정과제 11-⑥ 해양신산업 육성

-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및 주요 관광지별 소형 요트 계류시설 지원방안 검토
 - * ('14) 여수 → ('12~'15) 화천·여주·상주
- 전국해양스포츠 제전('14.8, 경북 울주) 등 각종 대회*를 통한 저변 확산
 - * 국제요트대회, 아라뱃길 카누마라톤대회, 스킨스쿠버대회 등
- 대도시 해양스포츠 체험교실 확대*('14.上, 2개소) 및 시범학교 지정('15)
 - * 현행 한강 유역 3개소(이촌·양화·김포) → '14년 2개소 추가(잠실·뚝섬 등)

6 여수박람회장을 동북아 해양관광 특구로 조성

대통령 지역공약(전남) “여수박람회장을 해양레저관광특구로 조성”

- 매각 촉진 및 임대방안 마련 등을 통한 국내외 유망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 추진(‘14.8)
 - * 관계기관 합동용역을 통해 사후활용계획 변경(안)을 마련, 여수박람회 기념 특별법상 사후활용지원위원회에 상정·의결
- 한국관 등 박람회 준치시설과 Big-O 등 핵심콘텐츠를 활용하고 신규 콘텐츠*를 보강하여 방문객 증대기반 강화(연중)
 - * 게스트하우스(3월), 기념관(5월), 스카이프라이·전기투어차(5월), 해양체험시설(7월)
- 지역 축제·공연, 국내외 회의·행사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등 유치
-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한 관심기업 발굴 및 타깃 마케팅(‘14.3~12)으로 실효성 있는 투자 유치 시행

다. 국민 참여형 해양문화교육 기반 조성

기 존	· 도서 보급 등을 통한 평면적 교육으로 활성화에 한계	⇒	개 선	· 체험 시설 등을 통한 입체적 교육 실시 및 해양史 등 교육범위 확대
--------	--------------------------------	---	--------	---

☞ 해양문화 활성화와 해양의식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내실화

1 해양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유형별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문화시설 확충 로드맵 마련(‘14.7)
 - 유류피해극복기념관(~15, 태안)·해양과학교육관(예타중) 등 시설 확충
- 대국민 해양의식 고취를 위해 학교·사회교육과 연계한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14.下)

2 해양문화·교육 콘텐츠 확대

- 해양쓰레기의 창조적 리사이클링('14.8~10) 등 **신개념 문화사업** 추진
 - * 해양쓰레기를 이용한 예술작품 공모, 유명작가 초청전 및 국제 컨퍼런스 등
 - 장보고 재조명, 해양영토 대장정, 이사부 항로·독도·신라 뱃길 탐사 등 **해양영토 순례**를 통한 **해양역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
 - * 해양문화 탐방지도, 해양 역사·인물사전 발간 및 다큐·UCC 등 제작 지원
 - **해양교육 시범학교 운영**(20개), 교재 개발 및 동아리 활동(40개교) 등 지원
 - 유인등대를 활용한 **해양문화 공간** 조성으로 해양문화 활성화
 - 문화재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등대인 **팔미도등대** **해양문화공간 확보**
 - 등대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대국민 해양의식 고취
- * 등대유물전시회, 미술전, 여름등대학교, 일일 등대장 체험 등

< 정책 추진 배경 >

◆ 정책 목표(국정과제와의 연계성)

- 행정 절차, 공공정보 공개 및 산하 공공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
- 국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먼저 찾아서 해소

◆ 정책의 가치

- 개인별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 달성
 - * (국정목표 추진기반 : 신뢰받는 정부)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 달성,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
- 산하 공공기관(14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공공부문의 비효율 제거
 - * 신년 기자회견 :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 시작될 것

◆ 장애요인 및 해소 방안

- 정부 3.0 가치의 확산과 공유 및 성과 미흡
 - ⇒ 국정과제와 현안 해결 중심의 과제 적극 발굴, 성과 평가 실시 및 교육활동 강화
 - ⇒ 민간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치 극대화(성공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 및 사례 전파)
-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 미비
 - ⇒ 기관장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를 기관장 인사에 반영
 - ⇒ 중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시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 의무화 등

가. 개방·공유의 투명한 행정 지향

기 존	· 정부 3.0 가치 확산 미흡 ·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미흡	⇒	개 선	· 성과평가 실시 및 교육·홍보 강화 · 성공사례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
--------	--------------------------------------	---	--------	--

☞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을 해양수산 전반으로 확산

1 국민 눈높이 행정 구현을 위한 해양수산 정부 3.0 본격 추진

- 국정과제·현안 해결 중심의 정부3.0 이행계획 수립('14.2) 및 해양수산 정책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과제* 중점 발굴 추진

* 예) 적조 등 재해피해어민 A씨를 위해 피해신고만으로 관련 보조금 수령 방법, 세제·융자, 각종 요금 감면(전기·가스료) 등 관련 정보 제공

- 정책의 모든 과정에 정부3.0 일하는 방식의 적용·확산을 위한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확립 및 교육·홍보 강화
- 매월 30일을 '정부3.0 Day'로 지정하고 교육·우수사례·성과발표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조직 내 정부3.0 가치 내재화

2 정책 결정의 전 과정에서 민관 협업 강화

-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불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책 수립·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 공공정보 사전정보공개·정책실명제('13), 원문정보 공개 실시('14.3~)

- 특히 의사 결정, 정책화, 발표 등 전 단계에서 사전에 해양수산 정책자문위 등 국민의 이해를 먼저 구하는 절차 화
- 장관과의 대화방(홈페이지), 온라인 정책토론(국민신문고), SNS 등 의견 수렴의 창구를 온라인으로도 확대

③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

- 106개 공공데이터 보유, '16년까지 26개 미개방 공공데이터*외 80개 공공데이터 개방 완료

* 보안, 영업비밀,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개방 불가한 데이터

** (∼'13) 44개 → (∼'14) 60개 → (∼'15) 70개 → (∼'16) 80개

- '14년도에 연안정비정보, 선박운항정보 등 16개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 공공데이터 품질 평가 및 표준화 등 품질 관리방안 마련('14.10)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정례화, 공모전 개최 및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등 추진('14.12)

* 예) 해수부와 관세청 화물 정보 융합 → 물류 리드타임 정보 발굴

- 해양조사정보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통플랫폼 구축('14.12)하고, 민간산업 융합을 통한 해양정보 산업시장 창출 추진('14~'17)

* 해양예보, 자원탐사, 해양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해양정보 Data-set을 구축하고 민간 활용을 유도

④ 행정 비효율을 제거한 '스마트 해양수산 행정' 실현

- 다부처·타지역 소재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는 영상회의를 활용하여 출장을 최소화하고, 영상업무협의 활용 등 디지털 협업 선도

* 부처간 협업과제, 전국단위 회의는 영상회의 의무이용대상으로 지정('14.2)

- 효과적인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 공유, 관련 시스템 연계 구축

- 지방청, 항만공사 등으로 분산된 항만물류정보 인프라를 개방형 플랫폼 기반으로 통합추진,

- 수산물 안전관리시스템을 식약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연계('14.12)하여 불량 수산식품의 시중 유통 사전 차단

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14개) 관리

대통령 신년구상('14.1.6)
“올해 공공기관의 정상화개혁 본격 시작”

기 존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만 의존	⇒	개 선	·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발굴 · 경영 및 재정 상황 상시 감독·평가
--------	------------------	---	--------	---

☞ 부채 관리, 방만 경영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보상 시스템 마련

① 공공기관 평가 체계 내실화

- 기재부 경영평가* 시 업무 역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무 부처와의 정책 협력도 등 신규 평가지표 발굴(기재부←해수부, '14.上)

* 대상 : 항만공사, 해양수산연수원, 공단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8개

- 해수부 - 공공기관(14개) 간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관장의 책임·성과 중심 경영 유도

- 기관장 임기 내 이행현황을 평가하여 연임 여부 등 인사에 반영

-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여 6개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시('15.上)

* 대상 : 항만보안공사, KIOST, KIMST, 협회 등

② 방만 경영 정상화 및 부채 관리 강화

-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중기 재무 관리계획 수립 시 담당 부서의 철저한 사전 검토 의무화('14.上)

- 불요불급한 사업 제한, 예산·인력·기능의 중복과 낭비 요인 제거 등 과감한 구조조정* 실시('14.2~, 민·관 합동 T/F 구성)

* 기관별로 정상화 대책 수립(~'14.3) 및 상시 점검

- 기관장 임금 삭감, 과도한 복지제도 개선 등 정부 합동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이행 여부 상시 점검('14.3~, 민·관 합동 T/F)

다. 국민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먼저 해소

① 비정상적 정상화

대통령 신년구상(14.1.6)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임기 내 추진할 핵심과제(6개) 및 즉각 개선이 가능한 단기과제(38개) 등 총 44건의 정상화에 역량 집중

※ 뿌리가 깊은 고질적 비정상적 관행 13개 과제 해결에 주력

핵심과제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원양·연근해·양식 어업 관행 근절 · 항만 운영·건설 관련 불합리 관행 개선 · 어업용 면세유, 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 수산물 도매시장 불법거래 근절 · 연안화물선의 선·화주간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 ·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의 부당한 근로여건 개선
단기과제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수협 금융사고 등 수협비리 근절 · 낚시어선 구멍조끼 미착용 관행 근절 · 어구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폐어구 해상투기 관행 개선 ·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 받은 지정검역물의 처분 강화 · 내항여객운송사업 비합리적 면허절차 개선 · 시운전선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항해안전 제고방안 마련 · 법적근거 없는 관행적 무장보안요원 선박 승선의 합법화

- 部 자체 관리과제도 목록·내용·이행현황 등을 홈페이지, SNS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 수렴·반영
- 산하 공공기관, 업·단체, 지자체 등과 함께 민·관 합동 위원회를 구성(14.3)하여 실적 점검 및 수요자 관점에서 정상화 과제 지속 발굴

※ 국민·종사자의 불편과 관계된 10개 과제는 100일 이내 집중 개선

▲요·보트 대여업 비상구조선 구비조건 완화, ▲방제분담금 징수절차 개선, ▲항만출입증 발급 신청체계 개선, ▲컨테이너 안전점검 사업자 자격기준 완화, ▲해양사고 관계인 출석조사 시 변론인 선임권 보장 등

② 국민·기업활동 편의 제고를 위한 10대 과제 해결

* 규제 개선, 비정상의 정상화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선이 필요한 과제

① 7개 기관*에 분산된 Port-MIS의 단일센터 통합

* 3개 항만청(부산·인천·여수)과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②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항만 이용자 편의 제고

- AIS(선박자동식별장치)와 연계되어 접안료·정박료를 자동계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입업무의 정확성·투명성 제고

* 접안료·정박료 고지건수 및 금액('13년) : 161,491건 / 1,022억원

- 지방청(표지사용료), PA(선박료), 해양환경관리공단(방제분담금) 등으로 분산된 납부고지 업무 통합 및 수납방법 개선*

* '13년 표지사용료(42,848건, 179억) / 선박료(166,066건, 2,162억) / 방제분담금(19,946건, 69억)

* (現) 지로납부 등 기관마다 상이 → (改) 지로납부·자동이체·신용카드 수납

③ IT 기술을 활용한 원양항해 선박 승선 선원 대상 해상원격 응급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소방방재청 협업)

④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의 Door To Door 서비스 실시

* 고가의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택배 회사에서 운반을 기피함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원거리 방문(여수 검사원)하여 인력과 경비 소요

- 검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검사물품 인수·검사 → 희망일 배송

⑤ 타 법에 의해 운영 중인 마리나도 「마리나항만법」 상의 혜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 처리기준 마련 및 마리나항만 지정 추진

* 공유수면 관리청이 마리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가능

⑥ 공유수면 매립관련 규제 정비*를 통한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 매립면허 취소 관련 정지처분 기간 명확화, 매립관련 보고·검사 요구자료 구체화, 공유수면 매립 명령이행 기간 설정 등

⑦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적용배제 확대로 해역이용자 편의제고

-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오일웬스 및 오탁방지막) 및 해수욕장 파라솔 등 해변의 이동시설물 설치를 협의대상에서 제외 추진

* 인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을 축소하면서 상공인·국민 등의 활동기회를 제한하는 규제 완화

⑧ 보름달물해파리 폴립 제거 및 모니터링

- 마산만, 새만금 등의 보름달물해파리 폴립* 제거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해수욕객 쏙임 및 원자력발전소 발전정지(감발) 등 피해 예방

* 해파리의 부착유생을 말하며, 무성생식을 통해 복제폴립을 만들고, 매년 늦은 봄에 부유유생(에피라)으로 자라나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성체로 성장함

⑨ 종이어업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교체·발급하여 어업허가 정보(어업허가내역, 면세유 등) 통합관리

- 개인별 어업허가일이 달라 기간 내 허가갱신 못하는 문제 발생 해소 등 기여

⑩ 평소 교육 기회가 적은 도서지역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순회 교육 및 어선 안전점검·오일교환 등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 정례적 실시

* 전국 50여개 민간 이동수리소를 활용, 지자체·선박안전기술공단·어업관리단과 협조하여 실시

V. 기대 효과(달라지는 해양수산)

1 늘어나는 일자리

□ '14년에는 5,105개의 신규 일자리 마련 * 산하 공공기관 1,063개

- 마리나 인프라 확충, 선박평형수 기술 확보 및 신규 부두 개장 등의 사업을 통해 일자리 증대 예상

구 분	'13	'14	'15	'16	'17	계
						('13~'17)
일자리 순증 (공공기관)	2,200 (688)	5,105 (1,063)	11,506 (4,270)	7,576 (175)	8,208 (9,538)	34,595 (15,734)

2 해양수산 분야 6대 불안 해소

① 수산식품 안전·물가 불안 ⇒ 값싸고 안전한 수산물 구매

- 수산물·해양환경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인력 보강)
 - * 소비자 단체와 일반 시민의 검사 과정 참여 및 결과의 투명한 공개
- 수산물 이력제 확대 시행 및 오염 우려 해역 지속 관리
 - * 이력제 : 양식산 → 연근해산 / 해역 관리 : 우리나라 주변 해역(27개정점) 지속관리
- 유통구조 개선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
 - * 산지유통가공 시설 및 소비지 도매시장 현대화 등
- 수산물 비축 사업 확대('13: 2% → '14: 2.5) 및 관측사업 내실화

② 해양 재난·재해·안전 사고 ⇒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 해양사고 발생 비율 감소('17년까지 30% 저감, 연평균 722건 → 505)

- 해양사고 대응 시간 단축('08~'12. 평균 19.6분 → '13. 19.4 → '14. 19 이내)
- 기항지 시설·연안 정비 등 여객·관광 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해양관광·레저스포츠 활성화
 - * 국내 여행 이동총량 중 해양관광 비중 : ('12) 50%, 1.8억日 → ('15) 55, 3
- 신속·정확한 적조·해파리 정보를 통한 피해 저감
- 적조 등 피해 시 재해보험 적용 품목이 확대되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
 - * 재해 적용 품목 : 넙치, 전복, 해사가두리어류(8종), 우렁쟁이, 미역, 뱀장어

③ 선원의 직업 불안정 및 구인난 ⇒ 안심 근무 환경, 인력 확보 용이

- 5톤 미만의 소형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도 보험에 의무 가입
 - * 조업 중 상해 어업인도 재할 급여 수령 ⇒ 생계 유지 및 현장 조기 복귀 가능
-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선원 퇴직연금 공제제도 도입으로 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외국인 선원 관리 강화로 기업은 안정적으로 인력 확보

④ 해양수산계 고교 졸업자 취업 불안 ⇒ 진학 기회 확대, 취업 경쟁력 제고

- 해양대 정원 증원으로 진학 기회 확대('13. 750명 → '14. 810)
- 해사고·수산고의 교육 인프라 정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⑤ 영세·중소·중견 기업 경영 불안 ⇒ 해외진출 활성화 및 강소기업 도약

- 해운·물류 기업 : 해운 불황 극복, 하역시장 안정화
- 연안 여객·원양어업 선사 : 선박 현대화, 정책 융자 확대 등
- 영세 가공업체 : 식품산업 거점 단지, 시설·운영자금 지원 등

⑥ 연안·어촌·도서민 거주 불안 ⇒ 소득과 복지의 균형

- 해상교통 운임 지원, 소득직불제 등 복지 확충
- 양식업, 수산물 유통가공 단지 등 소득 확대

3

활력 넘치는 해양수산업(지표로 보는)

지 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 GDP 기여도(%)	6.3	6.4	6.6	6.8	7.0
· 수산업 생산량(천톤)	3,152	3,163	3,174	3,189	3,206
· 수산업 수출액(억불)	22	25	30	38	46
· 어가수(호)	60,095	58,782	57,576	56,437	55,358
· 어가인구(명)	146,677	140,821	135,559	130,650	126,059
· 어가 소득(만원)	3,692	3,697	3,711	3,731	3,757
· 양식면적(ha)	138,342	139,860	141,404	142,948	144,488
· 수산물 소비량(1인, kg)	48.9	49.6	50	50.3	50.3
· 해운 외화가득액(억불)	290	314	341	369	400
· 선박량(천GT)	40,116	45,114	50,735	57,057	64,166
· 연안여객 이용객수(천명)	16,063	16,376	16,695	17,021	17,353
· 항만 물동량(백만톤)	1,349	1,450	1,558	1,612	1,667
· 컨테이너 처리량(천TEU)	22,550	25,410	26,973	28,687	30,509
· 컨부두 접안능력(선석)	88	88	94	99	105
· 컨부두 하역능력(천TEU)	24,237	24,237	25,945	27,517	29,184
· 해양보호구역(개소)	21	23	25	27	29
· 육상 폐기물 투기량(만m)	116	60	42	0.7	0.7
· 크루즈 관광객 입항 실적(만명)	79	91	100	105	110

VI. 분기별 추진계획

1. 일자리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일하겠습니다.

	1/A			2/A			3/A			4/A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근해 자원조사원 채용 확대			TAC 내실 화방 안마 련		승선 조사 원제 도입 검토	채용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추진						
- 해안쓰레기 수거 공공근로 확대	지침 마련	사업 공고	자금 배정	사업시행			실적 점검	사업시행			점검 및 평가	
- 해양대승선학과정 원증원		추진협의회 개최		관계기관(교육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협의 * 필요시 수시 추진협의회 개최								
- 해사고 졸업생 커리어 패스 관리제도 개발(개선)·운용	커리어패스 관리제도 개발(부산해사고)·개선(인천해사고)						제도 운용					
- 수산후계자 자금 확대	지침 마련	대상자 선정	자금 배정	자금(융자) 및 어업인교육 지원							자금 연장	
-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 인력양성	해외실습장 확보			기초안전교육 운영(24개) 및 양성과정(12개) 개발								
- 해운항만물류인력 양성		3차 계획 수립 위한 워킹그룹 구성	의견 수립	계획 수립 완료								
- 항만하역 교육 의무화												추진 방안 마련
- 해사고 교육여건개선	실습관 증축 공사('13~'14) 및 전자해도 시뮬레이터 도입·설치 및 운용											
- 오션폴리텍 실무능력 강화	업계 참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생 취업지원 사후관리팀 운영					
- 수산고 특성화교육 지원		지침 마련	사업 지원				실적 점검	사업 지원			실적 점검	

2. 해양수산업을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바꾸겠습니다.

(1) 성장 장애요인 해소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해운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불황극복 및 성장기반 조성													
- 해운기업 유동성 지원	대형선사 회사채 차환 발행 및 중견/중소선사 신규 회사채(P-CBO) 발행 지원												
- 해운보증기능 도입 추진	관계부처 연구 용역 (설립 여부 및 도입 방안 등 검토)						해운보증기능 운용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② 항만 하역시장 정상화로 항만물류 산업 정상화													
- 운영사 통합 및 하역 요금 인가제 전환 등 하역시장 안정화		감만부두 통합운영사 지원안 확정		하역요금 원가분석 실시									
				신선대-우암 통합운영사 지원안 확정		물량연동 임대료체계 마련		하역 요금 실태 조사		법령 개정			
- 항만운송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협의회 구성	
③ FTA에 대비한 약점 보완 및 자신감 제고													
- 성과평가 체계 내실화					성과 분석	성과평가·환류 시스템 구축		투융자 계획 수립					
- FTA 종합대책(안) 마련		추진방향 설정		연구용역						업종 대책 수립		초안 마련	
- 중국 현지 수출 전진 기지 설립	관계기관 협의			설계 변경추진		건축공사			준공·운영				
- 현지조사단 파견			대행사 선정	1차 파견	2차 파견				3차 파견	4차 파견	결과 보고		
④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항만 경쟁력 강화													
- 항만민자사업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자금 재조달 등 변경협상 추진									
- ‘컨’부두 하역능력 현실화 및 인프라 고도화 방안 마련		용역 착수	전국 ‘컨’부두 및 터미널 운영현황 조사, 해외사례 검토등				중간 보고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하역능력 재산정 및 인프라 고도화 방안 마련			
-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현장조사		대상항만 발굴			중간 보고		기본 계획 안 마련		

(2) 저성장 업종 · 신규 진입자를 위한 성장 사다리 구축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영세기업의 성장판 지원												
-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산업포털 개통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인하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안전성 검증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조성 검토	
-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추진 상황 점검					3개소 착공, 예비타당성 조사			2개소 완공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거점단지 운영자금	및 지원	수산물 가공산업발전 종합대책(안) 마련			자문평가단 구성·평가		염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 침 마련	
- 원양어선현대화		사업 공고		사업자 선정 및 용자 지원								
- 해외합작원양어업 관세감면	물량 배정			관세감면 추천								물량 협의
- 일반대출금 정책자금 대환	지침 개정	소요 과약		대환 실행								
- 연안해운 선박 현대화 지원 및 영세선사 경영 개선				이차보전 지원대상 확대 추진								
			표준 운송 계약서 마련, 협의체 구성			협의 체 운영			협의 체 운영			협의체 운영
② R&D 기반의 기술혁신 및 산업 발전체계 고도화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정		방 침 확 정		규 제 개 혁 심 사 및 법 제 처 심 사	차 관 회 의 및 국 무 회 의	국 회 제 출						
		입 법 예 고 및 관 계 부 처 협 의										
- 산업화센터 구축	설립			전문인력 확충 및 확대운영							원장 직속 확대 설치· 운 영	
③ 수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산업화지원센터 발족준비 및 발족								
- 모태펀드 출자			펀드결성 공고		운용사 선정		투자조합 결성			투자조합 운영		
- 기업 지원			농신보 예외보증 대상지정, 우대보증도입		수산 기술 평가체계마련							

(3) 기업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복지 확충을 통한 선원 구인난 해소												
-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노사정 추진위 운영											
- 선원복지시설 확충	복지시설운영 개선방안 마련			원양선원회과 증축(3~10월) 군산 비응항 선원복지회관 건립(4~10월)								
- 어선원 지원 및 발전방안 마련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 실시						초안 마련	관계 기관 협의	
② 외국인 선원 근로조건 및 인권 개선												
- 노사정 정책협의회 구성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개정안 마련	행정예고		규제심사 및 고시			협의 회구 성			
- 연근해어선 송입업체 평가제 도입	평가제 도입	설명회 개최			평가자료(외국인선원 인력풀, 기간이탈율, 입국시험 점수 등) 확보 후 15년부터 평가실시							
③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												
-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추 진계획수립		과제발굴 및 제도개선 지속								

(4) 해양수산 유망산업 육성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전주기 역량 강화												
- 심해공학수조		심해공학수조 연구동 설계 및 착공										
-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해양플랜트 산업 지원센터 설계 및 착공							
- 해양플랜트 해체시장 진출방안 마련		현지 조사			협의 체구 성							초안 마련
- 해양바이오 기술개발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 시행				해양바이오 지역 특화 선도기술 개발사업 계획 수립							
	차세대 해양생명공학 육성계획 수립											
② 해양 신재생에너지·자원 개발 기술 상용화												
- 심해저 해양광물산업 기반 마련	국제해저기구(ISA)와 탐사계약 체결											
- 해양에너지기술개발	제주시험발전소 건설											

[3] 양식업의 미래전략 산업화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												
- 친환경양식시설 지원			사업자 공모 및 선정	사업자 수					사업 점검			
- 골든시드프로젝트				1년차 실적평가					2년차 사업 점검			
- 수산생물질병 관리	백신 연구개발 연계수립	세균적 농도	백신 혼합조사	방역센터 설치					스쿠티카충 효능조사	충 능	방역 센터 준공	
- 수산백신개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임상실험 시스템 구축	현장 점검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스쿠티카 백신, 접막 전달자극 다가 백신, 개발 등		평가 및 계획 수립	
[4] 선박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성장 도모												
- 선박관리업 경쟁력 강화				선박관리전문가 양성(150명)	설명 회 (일본)				선박관리전문가 양성(150명)		정보 시스템 구축	
- 중소 조선업과의 동반 성장 (연근해어선현대화)	사업지침 마련		사업공고	사업자 선정	연근해 어선현대화 대체 건조 지원							
- 중소 조선업과의 동반 성장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800 톤급 조사선 착공	800톤급 수산자원 조사선 건조									
[5] 선박안전·환경 국제규제를 이용한 新해사산업 육성												
- 선박평형수 시장선점 민관협력	선박평형수 포럼개최안	국제 수립	MFC 66 대응	IMO 최종승인을 위한 육상시험(2건) 실시				포럼 개최	국내기술 표준 (구조변경)IMO 제출의제 마련			
- e-Nav. 세계시장 진출 기반 마련	예비타당성 조사											
	국제협력 시범사업(Test-beds)											
		국제 해사 포럼		'15년 예산작업				합의 회 구성		전략 이행 계획 발표		

(5) 친환경 기술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폐기물 이용 등 친환경 기술 개발·보급												
- 친환경 기자재 개발·보급 확대	사업지침 마련		업무협약 회	사업자선정		추진실적 점검				‘15년 사업수요조사	추진실적 점검	사업가평 및 환류
- 항만준설토사의 재활용 방안 마련		추진안 마련	재활용 방안 연구 추진							설계 및 시공기준 마련		
- 항만-어항 간 광역준설토 투기장 공동활용			용역착수	인천 입지조사 및 환경부, 인천시 관계기관 협의				광양항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입지선정		
②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 친환경 선박 시험·인증·표준화 시스템 구축	친환경 시험인증센터 주요설비 구축			배기가수 후처리 시스템 통합설계 완료 및 육상시험 착수			친환경 시험인증센터 준공		5000ps급 배기가스 후처리 통합시스템 제작완료			
- LNG 내항선 대체지원방안 검토				지원방안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방안 마련 (환경부, 산통부 등)					
- 제주시험과력발전소	제주시험발전소 건설											

3.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를 개척 하겠습니다.

(1) 극지 진출 역량 강화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극지 진출 기반 구축												
- 「북극정책 기본계획」 후속 조치 이행 등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참여 마련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	제2차 북극연구기획연구 시작						극지정보센터 운영	
-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 등		준공식 및 기지 완공		지질·빙하 연구 추진, 제1차 월동연구 수행								
② 극지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극지 선박안전 운항 R&D 추진	예산 (8억) 확보	주관기관 선정		연구기관 공고 선정	R&D 본격 추진							
-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거점항만 육성전략 마련			용역 착수					중간 보고	전문가자문		육성 전략 (초안) 마련	

(2) 유라시아 新물류 루트 구축

	1/A			2/A			3/A			4/A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유라시아 물류망 구축												
- 新해상 물류계획 수립										계획 수립		
- 국내선사 북극항로 운항지원 및 북극해연안국가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항만 시설 사후 감면(규정 개정)		활용 지원 협력 개최	극지 운항 프로 그램 수립	한-노르웨이 공동연구 착수				국적 선사 북극 항로 운항 추진		북극해 연안국 협력 회의	북극 항로 관련 국제 세미나
② 거점 국가와의 협력 강화												
- 러시아 극동항만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추진	MO U 체결	자문단구성		1차 용역 착수	현지조사 및 용역수행						1차 용역 완료	
- 극동러시아 물류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계획수립			
- 몽골과 해운물류협력 추진	한- 몽 해운 협력 회의	몽골 해상 선사 승실	한- 몽 해운 물류 협력 MOU 체결			한- 몽 해운 작사 협 회 설립	몽골광물자원 해상운송 개시					

(3)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1/A			2/A			3/A			4/A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국내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항만 집중 투자												
- 해외항만협력사업 다변화		초청연수 계획수립		수주지원을 위한 협력단 파견 및 대상국별 협력 다변화						초청연수 실시		
② 신규 해운시장 개척												
- 후해 연안 진출 지원	한-조지아 해협체		후해 진출 관련 TF 회의 개최			한-아제르 바이잔 해협 MOU 협			한-터키 해협 문협			
- 국적선사 해외진출을 위한 장애요인 제거	인도의 우리선사 해운소득 과세제도 개선			대만과 해운협력 회의 개최								
③ 글로벌 물류 거점 확장												
- 해운물류기업 해외물류거점 확보	지원 센터 운영		타당성 조사 수요 조사	동반 진출 수요 조사		타당성 조사 지원	포털 구축 방안 마련	동반 진출 지원				
④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협력 강화												
- 해외수산시설투자지원	사업지침 마련 및 시행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사업 추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		
- 해외 신어장 조사 추진	사업집행지 침 및 수요조사		사업자 선정	신어장 조사 추진						결과 보고		
⑤ 압도적인 품질 우위를 발판으로 '수산물 수출 韓流' 붐 조성												
-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운영 내실화	입주 업체 입주	개장 식 개최	단지 운영 활성화 및 운영사항점검							사업 평가		
- 수산물 수출 홍보 지원	계획 수립	모집 공고	업체 선정	사업추진		중간 점검	사업추진			사업 평가		

(4) 해양수산 글로벌 리더십 제고

	1/A			2/A			3/A			4/A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개도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원조사업 발굴·추진												
- FAO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한-FAO간 공동연구 추진	교섭 논의	설립 논의	아태 지역 홍보	한-FAO간 설립 논의	FAO 수위 홍보	한-FAO간 설립 논의						
				한-FAO 공동연구 추진								

②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강화												
- IMO 기준 대응강화	KMC 법인설 허가	IMO 교육정 신설 추진	IMO 전략제 의용 체	울 제사 해포 개	IMO 문위 크	IMO 국제 업동 발표	IMO 전연 기 지			IMO 문위 크	IMO 국제 업동 발표	'15년 기술 협업 선
-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 추진			방안 수립	관계기 관협 의 및 예산 반영				국회 예산심의 대응				
③ 미개척 지역에 대한 협력 기반 마련												
- 남태평양 협력방안 추진		유 관 기 관 협 의			한-남태평양 국제협력 회의 개최							
- 아프리카 협력방안 추진		유 관 기 관 협 의						한-아프리카 국제협력 회의 개최				

4. 바다와 연안, 도서를 국민의 행복한 삶터로 만들겠습니다.

(1)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서 관리 강화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새로운 해양영토 거점으로서 도서 관리·이용 확대												
- 도서종합관리방안 마련	계획안검토	관계 기 관 협 의	종합 계 획 마 련	후속조치 마련 및 시행								
-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관리유형 지정 (계속)											지정 완료
- 현황도 제작 추진			계약 체결					중간 보고			최종 보고	
- 영해기점무인도서 기본도 제작 및 영구시설물 설치	영구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영구 시설 물 설치 (2개소)	기본 도 제작 완료 (4개소)
- 미등록 무인도서 등록		관계 기 관 협 의		자재 협 의			등록 추진					
② 최외곽 도서 관리를 통한 해양영토 수호												
- 독도지속가능이용시행계획 수립·시행		계획 취 합	실무 협 의	계획 심의/ 수립								
- 이어도 과학기지 체류형 연구강화			체류형 연구 실시(210일) (10개기관, 16개 과제)									
			주거 및 안전시설 환경개선									
- 국가관리연안항 개발		사동 항 착 공				용기 포 항 착 공						

③ 도서민의 소득 · 주거 안정장치 마련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본업 시행			사업 신청 서류 접수	자금 대상 마을 선정	자금약정신청서 접수,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관리협약체 결 이행 점검		직불 금 지급	
- 양식업 조성						사업 중간 점검					양식 업 조 성 (5개소)	
④ 도서 주민에 대한 해상교통 복지 확충												
-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확대							지원 시행					
- 낙도보조항로 운영체계 개선	제도개선방안 마련										'15년 운영 계획 마련	

(2) 연안을 경제활성화의 전략거점으로 육성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권역별 해양경제 육성 마스터 플랜 마련													
-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		해양특구제도 기본구상 안 도출					해양특구 기본구상 방침 수립						
			부처간 협의체 운영		경제적 편익분석 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② 5대 메이저 항만의 국가·지역 산업 지원 역량 극대화													
- 부산항													
· 유류중계기지		유류중계기지 추진방안 마련 통항 안전성 방안 수립											
· 수리조선단지 및 LNG 벙커링 기지				수리조선단지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매립협의			수리조선 단지 계획 수립	LNG 기지 계획수립			
· 일반부두 기본계획(안) 마련				용역 착수	용역 추진				중간 보고		일반부두 기본계획 (안) 마련		
- 광양항													
· 여수신북항											착공		
· 묘도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선정		사업협상			사업 시행자 지정	
- 울산항								북방피 해준공				남방 2단계 착수	
- 인천항										크루즈 부두 임시 개장			
- 평택·당진항							해경 부두 착공						관리부 두완공

[3] 어촌·어항의 소득창출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												
- 어촌 6차산업화			추진체계 및 모델 정립 연구				계획 수립	6차산업화 시범사업 5개소 추진('14.9~15.12)				
-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중장기 발전방 안발표				인증 제타 당사 조 연구 영 역 추진				전국 대회 개최	자율 관 리 어 업 성 률 마 련	
- 어항기능 고도화	실시설계 용역 추진(4개항)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착수(3개항)			사업추진			
- 낚시산업 선진화	낚시 업자 전문 교육 (연중)			낚시 시설 환경 개 선 추진		낚시 포털 모 바 일 스 구 축				추진 현 장 실 태 점 검	평가	
[4] 정책 사각지대인 내륙 공유수면과 기수역 관리체계 정비												
- 내륙공유수면 관리 강화		업무 처리 요 시 달			담당 자 교육	부적 정 이 용 행 위 점 검						부적 정 이 용 행 위 점 검

(3) 빠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해상교통망 구축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연안 여객 2천만명 시대에 대비한 해상교통망 선진화 기반 마련												
- 해상교통망 선진화 계획 수립·시행		초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확정	시행					
② 수요자 중심의 해상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 해상교통인프라 DB 구축			초안 마련	보완		구축 완료						업데이트
- 인터넷·모바일 예약시스템 구축		추진방안 검토		착수			차량매표 시스템 도입					개편 완료

(4) 해양영토 관리기반 확대 및 조사역량 제고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해양영토 관할권 수호를 위한 관리역량 강화												
- 국가관할해역관리법 제정 및 해양영토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	입법 예고	각종심사		국회 제출	기본계획 전문가 자문 실시			기본계획 관계부처 협의			계획 확정	

② 해양조사 내실화 및 과학적 관리체계 마련											
- 해양지질조사	'13년 대상지역 조사결과 분석			결과 보고	'14년 대상지역 조사 및 분석						
- 차세대해양관측위성 개발	해양탐재제 예비설계			예비 설계 검토 회의	해양탐재제 상세설계						
③ 해양과학기지 중심의 해역별 관측체계 확립											
- 서해 해양과학기지 설치추진				구조물 변경·보강	해상설치 완료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활용 확대		주거 및 안전시설 환경개선		체류형 연구 실시(210일) (10개기관, 16개 과제)							
④ 과학적 수산자원 조사·관리 체계 확립											
- 자원조사 전담센터 건립		설계 안 마련	관계 기관 협의	설계 발주	설계용역			건설 안 마련	건설 발주		
- 금어기·금지체장 신설		어업인 및 지자체 설명회			개정안 마련	지역별 어업인 설명회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 수산자원조성사업 확대		인공어초 시설사업 지침 및 관리규정 개정			제2회 바다식 목일 기념 행사	바다 숲조 성사 업 중 간 평 가		사후 관 리 시 스 템 구 축		'15년 바다 숲 후 보 지 선 정	바다 숲조 성사 업 최 종 평 가

5.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로 가꾸겠습니다.

(1) 현장·생활 밀착형 해양안전 관리체계 구축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해양사고 30% 줄이기 문화의 정착 유도												
- 해양안전 종합대책 시행	의견수렴	관보고시	봄철안전대책			여름안전대책			가을안전대책		공모전	겨울안전대책
- 해적피해 Zero화 기조 유지	민관군동합훈련	'13년해적동향분석배포	ReCAAP관리이사회참석	해적관련IMO회의참석	청해부대견장추진	해적응대관계회의	RCAP역량강화워크숍개최	민관군동합훈련	'14년상반기해적동향분석배포	해적응대관계회의	RCAP관리자회의참석	해적응대선설명회
② 유류 오염사고 대응체계 개선												
- 유류부두 안전성 강화		안전관리자 배치										항만설계기준개정

- 방제인프라 개선						개정안 국회출 교이수 의무화 등 도선법 개정안 마련					요율 조정	
- 도선사 전문성 강화		도선 계획 제출			항만 별근 수척 마련							강제·매 일제도 화
③ 안전항행을 위한 해상교통안전 시스템 고도화												
- 종합상황실에 전국 VTS 정보 연계		발주		착수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설계 완료
- 관제장비 국산화			실적 점검		시연				자문 회의			실적 점검
- 첨단 항로표지시설 지속확충		확충표지시설 설계 및 발주			확충표지시설	착공 및 설치 추진					확충표지 시설 준공	
④ 항만시설 정비를 통한 배후도시와 국가 물류망 보호												
- 방제시설, 방파제 보강										삼척항 방제 시설 착공		내진설계 기준 정비
⑤ 어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적조 종합 대응			예보 체계 개선		매뉴 얼 개정					가두리 시설 개선		
- 해파리 피해저감 대응체계 구축				통합 방제 시스템 구축 수	이동 예측 모델 개발	해파 리 피해 방지 통합 대책 마련	사전 예보 서비스 실시					통합 방제 시스템 구축 완료
- 어항시설 확충			(신규항)설시설계 추진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 착수					사업추진		
- 조업어선 실시간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위치 확인 시스템 구축 공									위치 확인 시스템 구축 완료
- 노후기관 대체·장비개량	사업 지침 마련	사업공고		사업 지침 정						노후기관 대체·장비개량 지원사업 추진		
-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확대	실태조사 결과분석									어업인 공청회	확대 방안 마련	시행령 개정 추진

(2) 연안재해 · 식품안전 예방체계 확립

	1/A			2/A			3/A			4/A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연안침식 대응 강화												
- 연안침식관리구역제 운영			침식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방안 마련				대상지검토 및 후보지 선정		공청회 개최 및 관계부처 협의		연심 심의 및 지정, 관리계획수립	

- 침식대응기술 개발				'13년 연구 최종 평가		'14년 연구 착수								
- 연안침식 모니터링 실시	'13년 연안침식 모니터링 실시				'14년 연안침식 모니터링 실시									
-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안) 마련				연심 심의		변경 고시							
- 연안정비사업 자문단 운영	자문단 구성 및 기본계획수립 정책방 향 논의		자문단 운영(계속)											
② 안전한 해상활동을 위한 바다의 일기예보 등 활성화														
- 주요 해수욕장 이안류 감시시스템 운영				관계기관 협의	이안류 감시시스템 운영				후속조치 마련					
- 소형선박 전용항법 어플 개발·보급	CBT 실시		팸플릿 제작·배포		주요기능 업그레이드 및 OBT				정식서비스 (무료배포)					
③ 국민 불만 제로를 위한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 강화														
- 수산물 방사능 관리강화	조사 계획 수립		국내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안전성조사 실시								평가 회의			
④ 수산물 생산에서 식탁까지 안전·위생 관리 강화														
- 생산해역 위생관리	해역별 등급화 기초자료 조사					계 획 (안) 마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계 획 수립				
-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	사업자 선정		대상품목 취급업체, 컨설팅, 이력제 홍보				상반 기 평가		대상품목 취급업체, 컨설팅, 이력제 홍보				하반기 평가	

(3)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조성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사전 예방적 해양환경 관리체계 구축												
- 해양투기 제로화 후속 조치			연구 착수					전문 가 회의			종합 관리 방안 마련	
-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			T/F 구성		연구 착수						연구 완료	종합 대책 수립
- CO2 저장기술 실증화 기반 구축					전문가 회의			관계 부처 협의	CCS 센터 설립			시추 계획 마련
- 침몰선박 관리 강화			위해 도 평가 착수							평가 완료		대책 수립
- 해양생태계 교란·유해생물 관리기술 개발	생리생태특성 파악, 발생 및 확산 메커니즘 분석										사업 중간 평가	

- 해양쓰레기 수거			계약 체결			실태 조사				수립 완료	
-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계약	사업 착수							사업 준공
- 어구 종합관리 체계 구축	폐어구 투기 실태조사 및 어구 종합관리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법률안 마련		

-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울릉도, 백령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마련	주민설명회 개최 등	관계부처 협의	해수발전위 심의	장관 방침	지정·고시	
- 한강하구 등 특수지역 해양생태계 조사					조사 계획(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국방부)		시범조사		
- 해양생물의 증식 복원사업 추진						증복원사업 착수	전문가 협의 회 개최	사업추진	중간 보고회 개최	사업추진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계획 수립			전문가의견 수렴		보전계획초안 마련		관계기관협의	보전계획안 최종안마련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개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시범운영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법인 설립 및 개관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해 조업질서 확립													
－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중국어선 특별단속 시 및 관 관계 협회	선속실 관	중어지단 업도속 지단실 무의 회				중국어선 특별단속 실시	중·한 합동단속 및 관의 협회	중국어선 특별단속 실시		
－ 한·중어업공동위('13.10) 후속조치 이행 등					한·중 어공 위1차 준비 회의		중어문 제의 협		중·한 어공 2차 준비 회의 및 위 급의				중어문 제의 협
② 원양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책임 있는 조업국 위상 확립													
－ 원양어선 통제 시스템 운영			센터 조기 개소 및 VMS 모 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스템 범 위 확 대							센터 정상 운영		

6. 해양관광과 문화가 융성한 국가로 키우겠습니다.

(1) 크루즈·마리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확대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크루즈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공												
- 크루즈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양성 기관 선정			민관 유치 설명회						
- 크루즈부두 확충								속초항 여객부두 착공			부산북항 1선석 준공	
② 쉽게 즐길 수 있는 마리나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추진				투자 유치 설명회		유시 설치 기준	사업 자 공모					사업 계획 수립
-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정안 마련			용역 착수					중간 보고				수정 안 마 련
- 「마리나항만법」 개정 추진 (배후단지)						입안			법제 처 제출			국회 제출
-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전문 인력 양성 기관 공모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마리나 해외 인턴 과건 (1411~155)	

(2) 지역경제의 실핏줄이 되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연안의 해양관광·레저 자산화												
- 연안 유희지를 활용한 국민 휴양시설 조성	선도 사업(7개소)계속 추진											
- 연안완충구역 지정					대상지 선정 검토 및 후보지 선정			현장점검 및 관련지자체		협의	연심 심의	
- 연안경관 관리방안 마련			해양경관 디자인 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및 관리지침(안)마련						자체 워크숍	연안관리법 개정안 마련		
- 해양레저 복합공간 조성 (해중레저공원)						실시 설계 착수				실시 설계 완료		공사 착공
②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항만 기능 정비												
-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시행 협약체결					친수 공원 계획 국공 모	랜드마크 시설 결정					국제 여객 부두· 여객 터미 널 준공

- 인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재개발		사업협상	사업 행사 지정	사업계획 등 법적절차 이행									
③ 신개념 레저 육성 및 지역색이 있는 관광상품 개발													
- 해중레저활성화	해중레저 구성·운영	활성화 TF	해중 레저 활성화 대수	중저 점 을 정 리				해중 레저 국제					
- 해중레저·어촌체험마을	홍보 계수	회 리 업	해중 레저 점 을 정 리	어촌 체험 마을 개 방 마			해중 레저 점 을 정 리 (1개소)					어 촌 체험 마을 성 숙 화 (6개소)	
- 섬·어촌 관광상품화								해 안 도 보 여 행 활 성 화 대 수	양 마 을 어 촌 본 회 리 업				
④ 4계절 중단없는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 해안 도보여행 활성화				해안누리길 정비 및 홍보 지원				해 안 도 보 여 행 활 성 화 대 수				해 안 도 보 여 행 원 터 변 영 화	
⑤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													
-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여수, 화진, 여주, 상주, 등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추진(계속)										여 수 해 안 레 포 츠 운 공 화	
- 해양체험교실 확대 운영		체 험 교 실 중 심 운 영 계 수	체 험 교 실 중 심 운 영 계 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체 험 교 실 영 향 과 고	
⑥ 여수박람회장을 동북아 해양관광 특구로 조성													
- 사후활용계획 변경추진		사후활용계획 변경방안 연구 용역		사후활용 지원위원회 심의·확정									
- 박람회장 활성화		(연중) 집객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유치											
- 민간 투자 유치	관심기업 발굴		투자유치 전략 수립					투자 유치 마케팅					

(3) 국민참여형 해양문화교육 기반 조성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해양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해양문화시설 확충 로드맵 마련	관계자 면담 및 초안마련		의견수렴 (전문가, 관계기관)		로드맵마련							

- 해양교육 활성화방안 마련	관계자 면담 및 초안마련	의견수렴 (전문가, 관계기관)	계획 수립								
② 해양문화·교육 콘텐츠 확대											
-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저변 확대를 위한 이벤트	방침수립 및 대행사 선정	홍보 및 업사이클링 작품 공모	업사이클링 작품 만들기 교육, 업사이클링 기업 전시, 국제 심포지엄 및 각종 문화이벤트 시행								
- 해양문화 콘텐츠			장보고대상 선정, 시상	해양영토대장정 장보고유적지답사 이사부항로 탐방	신라벚길 탐사, 해양문화탐방지도 등 발간						
- 해양교육 콘텐츠			시범학교 지정 동아리 선정·지원 교재 출판사 선정	시범학교 운영 동아리 활동 교재원고 개발	우수 학교 및 동아리 선정·시상 교재개발						
- 유인등대를 등대해양문화 공간으로 조성	등대 해양문화의 날 행사, 갤러리 운영, 세미나실 운영										
			'바다의 날'등대 문화행사(5월) 및 등대 음악회 공연(매월)								해맞이 행사
	팔미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설계 및 발주		팔미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 사업추진						사업 준공		

7. 일 잘하고 신뢰받는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

(1) 개방·공유의 투명한 행정 지향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국민눈높이 행정 구현을 위한 해양수산 정부 3.0 본격 추진												
- 정부3.0 추진	2014년 세부이행 계획·맞춤형 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우수 사례 경대 회	
② 정책 결정의 전 과정에서 민·관 협업 강화												
- 민·관 협업 강화		장관 과의 대화 방 개 설	원문 정보 공 개 시 행									
③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												
-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2014년 시행계획 수립					지문 위 위 개 최				품 질 관 리 안 마 련		16개 데 이 터 개 방
④ 행정 비효율을 제거한 ‘스마트 해양수산 행정’ 실현												
- 디지털 협업 활성화		영상 회의 대상 지 정										
- 항만물류정보 통합인프라 구축	업무처리프로세스 개선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연계	계 획 수 립	세 부 추 진 계 마 련	사 업 차 선 정			사 업 간 점 검				수 산 식품 안전 정보 망 구 축		합 품 안전 정보 망 연 계 구 축

(2) 공공기관 관리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공공기관 평가체계 내실화												
- 업무역량 강화	평가지표 개발, 경영성과 협약체결											
② 방만경영 정상화 및 부채관리 강화												
- 재무건전성 강화		민관 TF 구성	상시점검									

(3) 국민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먼저 해소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비정상의 정상화															
- 정상화 세부과제 추진			신규과제 발굴, 이행현황 점검 등 지속 실시												
② 국민·기업활동 편의 제고를 위한 10대 과제 해결															
- Port-MIS 통합			업무처리프로세스 개선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항만 시설사용료 납부방식 개선			업무처리프로세스 개선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해상 원격의료서비스 확대			소방방재청 업무협약(MOU)						원격의료지원시스템 지원 확대를 위한 노·사·정 협의						
-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의 DtoD 서비스 실시			서비스 실시에 대한 민원인 (업·단체) 홍보			서비스 실시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해결			검사 Door to Door 서비스 실시						
- 「마리나항만법」 경과규정 적용 마리나 확대 등				경과 규정 처리 지침 마련					마리나 항만 구역 지정						
- 공유수면 매립 관련 규제 정비			개정안 마련 및 방침 결정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 해역이용협의 적용 배제 확대					개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국회제출				
- 보름달물해파리 폴립 제거 및 모니터링				제거 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폴립 제거				모니터링 및 폴립 제거			효과분석			
- 어업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연안·구획어업 전자어업허가증 교체·발급					발급현황 점검		연안·구획어업 전자어업 허가증 교체·발급				평가환류	
- 어업인 안전조업 순회교육 및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			안전교육 지침 수립		안전조업 순회교육										
				이동 서비스 지침 수립	이동 서비스 약정 체결	이동서비스 실시									

참 고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추진 관련 입법계획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법(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미래기술위원회 설치·운영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 기술수요조사,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등 성과활용 지원체계 마련 ○ 국제협력,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4월30일 ○ 국회 제출: 7월 30일 ○ 시행: 공포 후 6개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립면허의 우선순위 개정 ○ 인가·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 협의회 구성·운영 ○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사유 구체화 ○ 무단 점용·사용한 경우와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없이 점용·사용한 경우 벌칙규정의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8월31일 ○ 국회 제출: 10월 31일 ○ 시행: 공포 후 6개월 	
해양환경정책 기본법(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해양환경기준·조사에 관한 사항 ○ 해양환경오염방지시책에 관한 사항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10월31일 ○ 국회 제출: 12월 30일 ○ 시행: 공포 후 1년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관리해역의 지정·해제, 특별 관리해역 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오염물질관리 및 관리기반 강화를 위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5월30일 ○ 국회 제출: 8월30일 ○ 시행: 공포 후 1년 	
해양환경 관리법(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오염방제분담금 강제징수 근거 마련 ○ 해역관리청을 현실에 맞게 수정 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 보조금 지원근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3월31일 ○ 국회 제출: 5월31일 ○ 시행: 공포 후 6개월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일몰규제 재검토기한 명시	○ 법제처 제출: 10월10일 ○ 국회 제출: 12월15일 ○ 시행: 공포일	
국가관할해역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관할해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 ○ 관할해역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관할해역조사, 영해기선관리 실시 ○ 관할해역 정보분석과 정책지원을 위한 정보관리센터 구축	○ 법제처 제출: 4월30일 ○ 국회 제출: 8월 30일 ○ 시행: 공포 후 6개월	
수산업 협동조합법 (일부)	○ 중앙회 사업부문 재편, 중앙회 이사회 정수 축소(20명 이내), 상임 이사 축소, 사업전담대표 임기조정 (4년→2년), 소이사회 폐지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과 중앙회에 수산물 판매활성화 추진 의무부과, 중앙회 사업평가 및 유통지원자금 조성·운영	○ 법제처 제출: 4월30일 ○ 국회 제출: 6월 30일 ○ 시행: 공포 후 6개월	
수산업법 (전부)	○ (가칭)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추진에 따른 법령체계 정비 및 제도 보완 -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의 교육제도 도입 - 어업허가 평가제도 도입 ○ 공무참여 민간위원(중앙수산조정 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	○ 법제처 제출: 10월31일 ○ 국회제출: 15년1월31일 ○ 시행: 공포 후 1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 연근해어선 감척어업인 중 희망 감척의 경우 지원절차 간소화	○ 법제처 제출: 10월31일 ○ 국회 제출: 12월31일 ○ 시행: 공포 후 6개월	
어선법 (일부)	○ 어선의 거래·임차에 대한 어선 거래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법제처 제출: 9월30일 ○ 국회 제출: 12월31일 ○ 시행: 공포 후 6개월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수산자원 관리법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획금지기간·체장 위반처벌 강화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임직원 및 공무원참여 민간위원(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의제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6월30일 ○ 국회 제출: 8월30일 ○ 시행: 공포 후 6개월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시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및 낙시어선 안전성 검사 법제화 ○ 낙시터 사행행위영업 금지 규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8월31일 ○ 국회 제출: 10월31일 ○ 시행: 공포 후 6개월 	
양식산업 발전법(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어장개발계획 수립·시행 절차 체계화 및 양식업 면허·허가 정비 ○ 대규모 자본 유입 제한 완화 및 면허심사·평가제도 도입 ○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 관리 강화 ○ 한국양식산업관리공단 설립 ○ 양식업규모화 촉진, 해외양식산업 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6월30일 ○ 국회 제출: 9월30일 ○ 시행: 공포 후 1년 	국정 과제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등에 대한 수의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8월31일 ○ 국회 제출: 10월31일 ○ 시행: 공포 후 6개월 	
어촌특화발전 지원특별법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등 어촌 고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지원 추가 ○ 불필요한 조문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4월30일 ○ 국회 제출: 6월30일 ○ 시행: 공포 후 6개월 	국정 과제
국제선박 등록법(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 부당수령시 제재 및 손실보상 환수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10월31일 ○ 국회 제출: 12월31일 ○ 시행: 공포 후 6개월 	
선박투자 회사법(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투자업의 인가, 선박투자회사 합병제한 등에 대한 일몰규제 재검토기간을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10월14일 ○ 국회 제출: 12월14일 ○ 시행: 15년 1월 30일 	
선주상호보험 조합법(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서류 변경 인가 등에 대한 일몰규제 재검토기간을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9월30일 ○ 국회 제출: 12월1일 ○ 시행: 15년1월30일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선원법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노동협약 및 2010개정 STCW 협약 등 국제협약 반영 ○ 선원노동위원회, 직무상사고조사 절차, 선내폭행처벌, 행정처분 규정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5월31일 ○ 국회 제출: 7월31일 ○ 시행: 15년 3월 31일 	국정과제
한국해양수산 연수원법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자격검정시험을 담당하는 한국 해양수산연수원 임직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9월30일 ○ 국회 제출: 11월30일 ○ 시행: 15년 1월 31일 	
항만공사법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역시설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국유재산 무상대부 및 전대범위 조정 ○ 항만시설의 사용절차의 구체적 규정 및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체계 개선 ○ 항만공사운영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8월31일 ○ 국회 제출: 10월31일 ○ 시행: 공포 후 6개월 	
항만운송 사업법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하역요금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 항만운송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항만인력 수급관리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 부두운영회사 운영 근거 마련 및 항만운송 안전교육, 신규교육 의무화 ○ 항만운송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5월 31일 ○ 국회제출: 7월 31일 ○ 시행: 공포 후 1년 	
도선법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선사면허 등급의 세분화 및 도선사면허 유효기간, 갱신제도 도입 ○ 도선사 교육훈련제도 및 도선이용자 불만처리, 도선서비스 평가제도 신설 ○ 합헌성 제고를 위한 차별도선 금지대상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10월15일 ○ 국회 제출: 12월31일 ○ 시행: 공포 후 6개월 	
해사안전법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및 문화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지수' 개발·조사제도 도입 ○ 해양안전에 대한 지자체 참여 확대를 위한 '해양안전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9월30일 ○ 국회 제출: 11월28일 ○ 시행: 공포 후 6개월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유류오염손해 배상보장법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이하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권 소멸시한 신설 ○ 국제기금보상청구 소송정지의 경우 인지첩부 면제 또는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8월31일 ○ 국회 제출: 10월31일 ○ 시행 : 공포일 	
항로표지법 (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항로표지 관련 제도 대폭 보완 ○ 항로표지 배치 및 기능의 적정성 검토 검증 근거 마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9월30일 ○ 국회 제출: 11월30일 ○ 시행: 15년 12월 1일 	
신항만건설 촉진법(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에 대한 한시적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유예기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9월30일 ○ 국회 제출: 11월30일 ○ 시행: 공포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범위 확대, 배후단지, 상하가시설 신고·검사 근거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제출: 9월30일 ○ 국회 제출: 12월 31일 ○ 시행: 공포 후 6개월 	